

제371회 국회
(정기회)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임시회의록)

제 5 호

국회사무처

2019년10월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 국무위원(여성가족 이정옥) 인사 1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 의사일정 변경의 건 7
-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8

(14시04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국무위원(여성가족 이정옥) 인사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입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 정치 발전을 넘어 진정한 사회 발전으로 나아가는 시기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돌봄이 존중받고 다양한 가족들이 어울리는 포용 사회를 만들고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성차별 구조와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4시06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4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출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오늘 질의는 총리와 법무부장관께만 있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쉬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 여러 국정 현안은 난맥상을 보이는데 총리의 의지대로 잘 해결되지 않으니 힘이 드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만족스럽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주호영 의원 지난 토요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집회는 참가 인원도 많았고 조국 이슈를 검찰 이슈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최 측의 의도가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의도가 뭔지, 주최 측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무척 많은 분들이 모이셨구나, 그것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참가 인원이 처음에는 10만이라고 보도되었다가 80만, 100만, 드디어 민주당은 200만 명이라고까지 발표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보도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호영 의원 지금 정부가 이런 보고를 안 하는 모양이지요, 행안부에서?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 당초 서초구 축제 폐막식에 참석한 인원이 7만 명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주호영 의원 처음 들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호영 의원 다 보도가 되었었는데……

○국무총리 이낙연 자세히 못 봤습니다.

○주호영 의원 집회 인원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페르미 추정법에 의하면 폭 40m, 길이 560m의 집회 장소에 평방미터당 9명씩 잡아도 5만 명에 불과하다는데 200만 명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서로 주장이 너무 다르니까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불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저울을 속이기 시작할 때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는 옛말도 있고, 성경에도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해소할 방법을 총리가 가지고 있

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갖고 있다기보다는 언론기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이번 촛불집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격려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내 국민, 네 국민’이 따로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호영 의원 10월 3일 광화문에서 조국 사퇴,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최 측에서는 150만 명까지 모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집회에서 나오는 요구도 똑같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물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국민을 통합시키고 합쳐야 될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대결 정치, 국론 분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국민과 싸우는 정치보다 더 나쁜 정치가 국민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치입니다. 후과가 있을 것으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총리, 지금 조국 일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수사 내용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피의사실 공표의 논란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여론도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주호영 의원 지금까지 대형 수사 중에서 피의사실이 밖으로 하나도 나오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됐는데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지요. 그런 것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다음에 이번의 경우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주호영 의원 적폐 청산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오히려 조장하고 활용하던 세력들이 이제 와서 피의사실 공표 안 된다고 난리 치니까 그것이 좀 우스운 일이고요.

과잉 수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과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주호영 의원 여성 2명만 있는데 압수수색 해서 과한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도 따져 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장내 소란)

말씀을 들어보세요.

압수수색 시간이 11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5시간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도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 총리, 설명하면 피의사실 공표라 그러고…… 대충 다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압수 대상에 관해서 이의를 하는 바람에 추가 영장을 두 번이나 받아야 했고, 장관 전화 받아야 했고.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자제하는 것인데요. 보완 영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 것 등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주호영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 직접 검찰에 충분하지 않다고 국민에게 설명하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요 언젠가는 그런 것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저는 윤석열 총장의 조국 일가 수사가 실질적으로는 봐주기 수사라고 단정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사 수단인 자택 압수수색을 시간을 한 달 이상 끌다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수사 단서인 자택 압수수사와 휴대폰 압수를 한 달 이상 안 한 수사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글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글썄요, 검찰이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 대통령과 조국 교수는 산 권력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법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독려하던 분들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는 검찰총장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

당 대표를 위시한 여러 의원들, 청와대 정무수석, 지지 단체까지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요체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영역 없는 수사인데 자신들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수사를 막아서는 이 율배반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구이언이자 법치주의의 파괴입니다.

개혁이 범법자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연속 이틀간 특정 수사 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발표를 하자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수사를 막아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수사 방해·압력을 당장 중단하고 수사를 더 독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통령께서도 어제 법무부장관께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찰개혁 방안을 준비하되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것을 내놓으면 수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 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조 장관 수사 다 끝나고 그 말씀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밥 퍼내고 누룽지 끓여도 되는데 밥도 퍼내지 않고 물을 부어서 온통 수사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검찰개혁은 조 장관 문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의 과제였지 않습니까?

○주호영 의원 왜 하필 지금 와서 강조하고 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지금 많이 힘이 드시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주호영 의원 지금 너무 멀리 왔다고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매일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우리 국민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조국 씨를 법무부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

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장내 소란)

다 들어 봐요.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법무부장관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황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장관으로도 인정 안 하면서 왜 질의를 합니까? 장관으로 인정할 때 질의를 하셔야지.)

(「질문을 하지 말든지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조 장관의 주장은 부인은 문제가 있어 검찰과 갈등이 있지마는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제 처의……

○주호영 의원 여기 범죄 의혹들 한번 보십시오.

너무 많아서 줄여 줄여서 22개로 요약해 봤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부인의 범죄 의혹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본인의 의혹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 조국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수사 대상이고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언급하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주호영 의원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많고 복잡한 사건의 진위를 수사를 더 엄격히 하고 많은 수사진을 투입해서 해도 쉽지 않은 사안인데 온갖 곳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알지 못합니다.

○주호영 의원 알지 못해요?

○법무부장관 조국 저는 수사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조 장관의 진퇴는 사법 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는 어떤 경우에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통상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서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그러면 재판까지 확정판결이 있어야 확인되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낮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았다’고 한 적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주호영 의원 본인의 양심이 있다면 수사 받으면 그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과거 그 의견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아마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주호영 의원 지난번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던가요?

○법무부장관 조국 저는 영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부인이나 변호사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변호사가 보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주호영 의원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변호인의 말은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다가 삭제된 일이 있습니다. 관계자 중에서 공직자는 조 수석밖에 없어서 저의 법조 경험에 의하면 조 수석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보받은 일이 없나요?

○법무부장관 조국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오늘까지 알지 못합니다.

○주호영 의원 없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알지 못합니다.

○주호영 의원 아니, 집에 가면 부인과 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법무부장관 조국 통지받은 적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 서초동 주변에서는 정 교수의 출석이 이처럼 늦어지자 정 교수가 소환에 불응하

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환 불응한 일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수사에 언제든지 협력할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 검찰이 공개 소환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사 1층으로 통상 국민들과 같이 부르겠다고 하다가 오늘 보도는 비공개 소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나 조 장관이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전혀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 증권사 직원 김 모 씨가 부인의 요청으로 자택에 와서 하드 두 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만난 일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퇴근하면서 얼굴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한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그런 취지의 말은 한 것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호영 의원** 기억나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냥 얼굴을 보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언론 보도상으로 났는데, 제가 정확히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본 것은 사실이고 의례적 인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주호영 의원** 지난번 기자간담회 할 때 고려건설 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의원** 보시는 것처럼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 등재에는 본인의 인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데, 인감도 선친이 아무 말씀 없이 혼자 하신 건가요?

○**법무부장관 조국** 이 당시 고려종합건설 관계는 제가 일체의 경영이건 뭐건 관여하지 않았고요 이 이사 등재 문제도 제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친께서 처리한 것으로 추측을 해 봅니다. 당시에 제가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원생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장내 소란)

○**주호영 의원** 아니, 본인의 인감을 낸 법대생이었는데 본인의 인감을 내어 놓고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당시에 아마 부친께서 처리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래된 일이고 당시에 제가 대학원생에 불과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을 고려대학교 입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이 자료를 보면 논문이 제출되었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 저희 딸아이가 논문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해서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나중에 수사와 재판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다른 답변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시점에 발언했던 것은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또 그다음에 당시에 확인했던 것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호영 의원** 지난 5월 중앙지검은 제자들 작성 논문으로 딸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성균관대학교 이 모 교수를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한 사실 알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보도를 보았습니다.

○**주호영 의원** 정유라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 모 전 이대 총장, 학점 특혜를 준 모 교수 모두 구속 기소된 사실 알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만약에 부인인 정 교수가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논문 작성이나 인턴증명서 부정 발급에 관여되었고 이것이 입학에 연결된다면 신병 처리는 구속이 맞습니까, 불구속이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유시민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영장 기각률은 20% 내외이고 매년 5000건 이상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구속영장 기각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그러면 특별히 정 교수는 법무부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저는 그런 의견을 표시한 바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적 있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주호영 의원** ‘법무부장관입니다’라고 밝힌 적 있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조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했지요.

(장내 소란)

그다음에 말씀드리자면 주 의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상 저는 자택의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권리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압수수색에 대한 일체의 지휘나 지시나 관여가 없었습니다. 제 처가 사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호영 의원** 신속히 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한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처의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니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그 배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배려입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배려해 달라는 그 정도의 말입니다.

○**주호영 의원** 어떻게 해야 배려를 하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너무 놀라게 해 주지 말아 달라’ 이런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쓰지 않았습시다마는 제 마음속에는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으니까 놀라지 않게 해 달라’ 이 정도의 취지였습니다. 물론 그 단어는 쓰지 않았습시다.

○**주호영 의원**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것도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압수수색의 범위에 관해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하면서 추가영장이 발부되는 상황

에서 신속하게 해 달라는 것은 적당히 하고 빨리 그만두라는 말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 장관은 이 행위가 인륜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인륜은 부인에게 전화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것까지가 인륜이고 검사 전화 바꾼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공사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바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처가 순식간에 바꿔 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내 소란)

그 점에 있어서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집안의 가장으로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 호소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되어 있으니 법적 판단이 있겠지요?

지금까지 특별수사팀 파견검사 중에서 근무연장 승인을 법무부가 거부한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 없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호영 의원**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학재 의원이 16일째 단식하고 있는 소식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예, 들었습니다.

○**주호영 의원** 마치고 나가면서 단식을 만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호영 의원** 총리 나와 주십시오.

(「대정부질문을 하십시오.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총리님, 오늘 국군의 날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호영 의원** 국군의 날에 이런 질문을 하려니 좀 참담합니다마는 영토 보전은 헌법 66조에 나온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호영 의원 함박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까, 북측의 관할도서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 경계선 북쪽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호영 의원 함박도는 휴전 이후 우리의 실효적인 지배하에 있었고 65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에도 우리 관할로 보고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에 지금도 대한민국 국토부가 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방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쉽게, 북측 땅이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을 하고 버리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1978년 김포군청의 행정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다툼이 있으면 더 살펴보고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민관검증단이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북한이 17년 5월부터 초소를 만들고 레이더를 배치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여기에 중요군사시설을 구축하는데 당연히 지휘계통을 통해서 국군통수권자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리라 짐작합니다.

○주호영 의원 확인해 보시고 보고 과정, 조치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 문책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알아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이 일도 언론사에서 먼저 보도가 나갔고 이후 위성사진을 보다가 발견한 일이지 우리 군이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먼저 보고한 일이 없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이런 중요한 일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보도 나오자 겨우 덮기에 급급한 이유가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마도 정전협정 당시의 그 일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그 과정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이처럼 북측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기에 급급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경고를 하고 있고요. 군사적 긴장 완화에 저해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아니, 새로이 군사 초소를 설치하고 레이더를 했는데 이게 도발행위가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 지금 민관 합동으로 검증이 곧 시작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대통령을 뽑은 사람도 국민들이지마는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안보 무장해제, 무모한 소득 주도 성장의 강행, 느닷없는 탈원전, 4대강 보 파괴, 조국 장관 임명 등 인사 폭거, 상대에게는 적폐 청산, 내 편은 수사 방해, 갈수록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참으로 짧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응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비참하게 끝난 정권의 말로들, 권력에서 내려올 때를 기억하고 제발 겸손하게 민심을 받들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32분)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

조 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총 12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문희상 그러면 계속해서 인천 남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의원 처음 해 보는 거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맹성규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현안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검찰 개혁에 관해 어제 대통령님께서 검찰에게 지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맹성규 의원 검찰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맹성규 의원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행정부의 일부 구성원이라는 점과 주말 서초동에 모여 검찰 개혁을 염원한 수많은 촛불시민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하부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

는 것은 제가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맹성규 의원 그리고 검찰의 패스트트랙 조사에 대해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해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전원이 조사에 불응하고 사건 조사는 9월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이 9월 27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을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보면 소환을 통보하기까지 17일이나 소요되는 등 검찰수사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검찰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제가 절감한 것 가운데 하나는 검찰권 국가의 공권력을 몹시 존중하시는 분들이 왜 조사에는 불응하는가, 이율배반은 아닌가 하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 언론에 따르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환 대상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의원들을 대신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표님이 가신 건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고요.

정말로 검찰권을 존중하신다면 검찰의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맹성규 의원 패스트트랙과 검찰 개혁 모두 총리님께서 끝까지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맹성규 의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맹성규 의원 조국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주최 측 추산 약 200만 명이 참가하는 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셨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촛불시민들이 저 개인을 위해서 나섰다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 이것을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 장관님, 어제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그렇습니다.

○**맹성규 의원** 어떤 내용에 대해 보고하셨고 어떤 말씀이 오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과거 검찰 총장님들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사안입니다. 즉 인권옹호, 민생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서는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된다는 것이 사실상 검찰 조직 내외 모두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맹성규 의원**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크게 봐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분들은 형사공판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매달 수백 건의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사라거나 복지라거나 등에 있어서 큰 혜택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형사공판부에 소속돼 있는 검사들이 다른 쪽으로, 다른 부서나 또 다른 어떤 직접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 부담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하나 고민이었지요.

두 번째는 검찰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되어 있지만 검찰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권 옹호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미진하다는 판단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권 옹호를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검찰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밤샘 수사를 하거나 별건수사를 하거나 등등에 있어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맹성규 의원** 우리는 장관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

니다. 어제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그렇습니다.

○**맹성규 의원**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표창장과 관련해서 사전에 야당 의원들과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 보도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학력과 관련한 논란도 있습니다. 단국대 학사 제적인데 수료로 표기했다거나 미국에서 받은 학위가 허위라는 논란입니다.

이분은 이런 학위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 총장 재임용도 지원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사립대 이사 지원 등도 하셨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최근에 저희가 단국대 졸업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서 단국대 학교 측으로부터 제적임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최성해 총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우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국대에서는 확인을 했고 위싱턴 침례신학대에서는 저희가 미국의 고등교육 인증 담당 기관에 이 위싱턴침례신학대학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지를 공식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총장이나 또 이사 승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양대학교 측에 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학교에 가서 총장 승인 과정에서 제출했던 서류에 이렇게 허위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또 그런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성규 의원** 빠른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맹성규 의원**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근본적으로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우리 사회는 기존의 운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작아진 옷과 헌옷을 새 옷과 큰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 사회 운영의 틀도 커진 우리 사회의 몸집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사법개혁도 우리 커진 몸집에 맞도록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운영의 틀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노인층 인구 변화로 인한 소비시장의 변화, 취학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감소, 교직원 수의 감소 등 교육구조의 변화, 생산인구와 부양인구 비율의 변화는 청년 구인난, 노년층 일자리 확대,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세입 감소로 그리고 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건복지 분야의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 실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합계출산율?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0.98입니다.

○맹성규 의원 0.98명, 평생 한 명도 안 되는 아이를 낳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11개 부처에서 96개 과제를 저출산 정책으로 목표를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우선 저는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평가의 지표라고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한 세대 후의 발전까지를 고려하는 것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한 세대 후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출산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대

한 고려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산 주체자의 사회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공동체의 복원 또 돌봄 노동의 편중된 하중 부담, 이런 부분까지를 섬세하게 고려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성규 의원 그러면 장관님께서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간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출산 통제를 해야 된다는 정책을 집약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 차원까지는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인식을 하고 저출산이…… 두 번째 단계는 저출산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다가 이제 3단계에 이르러서는 저출산은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는 단계적 접근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는 그 접근의 방향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감사합니다.

○맹성규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님, 고령화에 대해서 여쭙고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우리나라의 65세 고령인구는 768만 명으로 추산되고요,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의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14개 부처에서 57개 과제를 고령화 대책 과제로 수행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OECD의 4배가 넘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우리 노령층의 빈곤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현상입니다. 우리가 31년 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 상태로 가서는 장차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대부분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고, 그래서 31년 전에 국민연금제도를 시작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왔습시다

는 아직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발달사를 보면 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부터 먼저 연금을 주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립기간을 요구하는 그런 연금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국민연금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노인들의 경우 혹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못한 50대 중반의 분들은 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넣고도 곧바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충분한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견된, 노후소득 보장의 미약점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 약 한 45% 내외의 노인분들이 상대빈곤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에 대해서 장기간의 적립을 요구하는 연금제도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장차는 그것이 해결되겠지만 당장은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인의 빈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도입을 해서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 25만 원으로 올렸고 올해는 노인 하위 20% 층에 대해서는 30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서 우선 긴급한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맹성규 의원** 앞으로도 고령 인구의 일자리, 건강, 요양 대책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정조직의 구성 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차례 넘게 행정조직을 개편했지만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췄고 특정 행정조직이 전담하기 어려운 문제는 각종 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현재 저출산·고령화 과제는 163개 과제를 20개의 정부조직에서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

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여러 부처가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과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7개 부처 장관, 17명의 민간위원 그리고 38명의 파견 공무원들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년의 운영 실태를 보면 본위원회 2번, 운영위원회 3회 개최되었지만 다 서면심의고요. 따라서 각 부처의 과제를 잘 이해하고 실효성 있게 업무를 조정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4월에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인구대응 TF를 별도로 또 만들었어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실로서 나타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맹성규 의원** 성과가 안 나오는 주요 이유는 정부조직 구성 방식이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위원회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2년 동안 임기를 채우면 파견 후에 원부서로 돌아가는데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장관님, 이렇게 어떤 특정 위원회에 파견되어 나온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일만 죽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 정권은 5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후에 새로운 정부는 그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부조직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정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특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부처의 업무를 이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특임부서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권·인사권·예산권 등 과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일몰제로 운영을 하되 기존 업무 담당 공무원의 파견을 받아 인력을 늘리지 말고 설치부터 종료 때까지 근무하도록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임부서 활동 종료 후에는 부서 전체의 성과와 개인평가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다시 복귀시키든 유학을 보내 주든 승진을 우대 조치를 하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임부서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맹 의원님께서 이제 그동안 중앙부처에 근무한 경험 또 지방에 근무한 경험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런 제안을 하시는데 그런 특임부서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정부조직상 갑자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한번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런 부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그 부서가 의사결정을 하면 또 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집행은 그 부서만 할 수 없는 거니까, 또 여러 부서가 집행에 관여를 해야 돼서 아이디어로서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맹성규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임부서 신설에 대해 장관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인력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고령화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게 19년에 5조 원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요 국정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교류 현황이 어떻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기대만큼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서울로 안 가려고들 노력을 합니다, 저 같으면 기를 쓰고 갈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승진하는 데 가점을 주겠다 이런 등등의 인센티브까지 주어서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습니다.

○**맹성규 의원** 18년 한 해만 보면 약 300명이

국제기구나 국외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약 200명만이 중앙과 지방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세부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지방 파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는 인사 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요건의 하나로서 지방 근무 또는 국제기구 근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상위의 의무로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성규 의원** 다음에 이제 재정에 대해서 여쭙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지난 5년간, 19년, 금년까지 212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으로 재정이 투입됐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데요.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200조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분야도 하위 과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즉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카테고리도 구분돼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세 하위 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요 국정과제는 상위 카테고리로 저출산·고령화 대책뿐만 아니라 노인, 청년, 균형 발전 등의 과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정과제, 특히 주요 국정과제를 예산 항목에서 별도 범주에 넣으려고 하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검토하는 게 짧은 기간 내에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현행 제도를 일단 유지하되 주요 국정과제를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비중 있게 추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운용의 묘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범주를 만드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성규 의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출 소요가 달성돼야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 그리고 국가부채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타당성을 얻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맹성규 의원** 다음에 국책사업 수립 과정입니다. 국책사업은 기안·실행·평가 단계로 이루어 지는데 담당자들이 수시 바뀌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면책 기능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아예 없애고 부처 장관이 정책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서 총리가 관여하는 것은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사이드가 너무 빈번해서 그 누구도 장기적으로 다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고 전문성을 쌓기도 어렵고 우리 공직사회의 크나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사 요인은 1년에 두 번씩 반드시 생기게 되고요, 채용도 있고 퇴직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국은 고도의 전문성이나 계속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급 또는 직무 분야에 한해서라도 근무기간을 늘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맹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맹성규 의원** 지금까지 저는 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 사회 운영 틀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안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가비용이 필요 없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의 부서가 나서거나 위원회를 설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과를 내는 정부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김수민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조국** 예.

○**김수민 의원**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요 가끔씩 다른 상품이 잘못 배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대급 배송사고가 지금 우리나라를,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분명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장관을 주문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돼 왔습니다.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돼 왔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하신 그 첫마디, 장관의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하신 겁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장관으로서 지시를 하거나 또는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색이 된 아내가 전화를 바꿔 줘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수민 의원**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말씀 새겨들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지금 국민들의 계속되는 사퇴 요구와 또 의혹 관련 해명 요구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장관께서 출근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매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책임감을 느끼시고 정작 책임은 지지 않고 계시거든요. 사회에 대한 이해 또 청년의 아픔에 공감하기를 포기하신 장관님을 보면서요 우리 사회가 권력과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로 퇴행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번 사태로 기득권의 특권, 반칙, 위선이 낱알이 드러났는데 최소한의 자정 능력도 상실하고 자성과 반성이 없는 의미 없는 정쟁을 이어 가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 또한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혹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들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해질녘에 모든 사물이 붉게 물들 때 다가오는 물체의 실루엣이 내가 키우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선과 악의 구분, 불의와 정의의 경계가 사라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권력만이 지금 유일하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깨어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예, 저는 저에 대해서 청년들의 비판이 특히 뼈아팠습니다. 또 제 아이 또래 나이의 청년들이 느꼈을 분노, 실망, 아픔 역시 제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픕니다.

○**김수민 의원** 장관님, 오늘 제가 대정부질문에 앞서서요 조국 장관에게 전하고 싶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양일간 총 100여 명의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습시다. 문재인 정권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조국이 아빠가 아니라서 슬픈 청년들은요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작금의 현실에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대신해서 이 청년들의 질문 두 가지만 장관께 여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자녀 연구논문 특혜가 얼마나 부끄럽고 장관 자격이 없는 일인지 조국 장관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젊은 세대의 노력과 성과 보상에 대한 좌절감을 더욱 느끼게 하는 대표적 사례라 생각합니다’라고 써 주신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아마 저희 아이 단국대 인턴 논문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 1저자 기준이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시 시점에서 저나 저희 아이가 그 1저자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데 실제 인턴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만 말

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경위에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인턴을 했고 그 증명서를 받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지금 지적한 청년의 목소리, 제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다음입니다.

‘현 정부의 촛불혁명의 위선에 분노감을 느낀다. 겉으로는 기회와 교육의 평등을 외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었다. 장관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저희 가족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모두 따라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김수민 의원** 장관님, 도서관을 향하는 아주 바쁜 걸음을 멈추고 이 질문을 써 준 평범한 청년들은요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노력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노력한 사람이 잘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총리님의 역할이 맞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늘 그것을 지향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한다고 잘사는 사회는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성을 해하는, 해치는 일도 있고 제도도 불비해서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가 무엇이든 가진 사람들이 자기와 자식들의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 어느 사회에나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도 버젓이 있다, 이것이 청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총리님,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제가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노력에 배신당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아무리 노력과 열정을 쏟아도 원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투자비용 대비 그 수익률, 즉 ROI가 극히 낮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친다면 청년들은 오히려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더 잘 아실 수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0~70년대에 태어난 기성세대에 비교해서 지금 80~90년대 청년들은 입시, 취업, 부의 축적, 노후 대비와 같은 인생의 전 단계에 있어서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중 삼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입시 전쟁을 치르면서 대학에 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취업 지옥이고 또 어렵사리 취업해서 숨만 쉬고 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통장은 죽을 때까지 마이너스고 내 집 마련은 진짜 말 그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그간 노력과 열정의 보상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반칙과 특권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는 기득권이 그 카르텔을 대물림하는 것을 방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경북대학교 총학에서 시작된 조국 장관 자녀입시 특혜 의혹으로 발발한 고위공직자 자녀입시 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수민 의원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태가 과연 조국 장관 한 명만의 문제겠느냐, 이미 존재하는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 또한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포함해서 청와대 인사, 실장급 이상의 행정·사법 공무원, 현재 재산 공개의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자녀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특별법 제정에 총리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동의합니다.

○김수민 의원 그리고 총리님 지금 상황이 너무 늦었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미래로의 생존을 위해서 총리께서 지금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세대 이해를 바로 정책

에 담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별 청년담당 관제를 의무화하는 것,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도 비슷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청년기본법을 빨리 제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 법적인 틀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을 기다리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단계로서 총리실에 청년 정책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각 부처의 국장급 중에 청년정책책임관이라는 분을 겸직입니다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총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대정부질문 당시에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고 총리께서 긍정적 검토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김수민 의원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SKY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수민 의원 그 드라마의 내용은 세상 쉬운 의대 입학을 너무나도 힘겹게 이루고자 했던 안타까운 서민들의 고군분투를 그려낸 휴먼드라마입니다.

조국 장관이 쏘아 올린 그 신계급론과 더불어서 국민들은 가장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교육의 기회가 우리 사회 상층부의 기득권 계급에만 활짝 열려 있음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조국 사태로 그 어느 부처보다도 교육부장관께서 가장 바쁘신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대입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수민 의원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국 청문회 정국이 한창인 9월 1일에 대통령께서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주문을 하셨고 한 달 밖에 안 돼서 모든 계획이 지금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11월 달에 발표를 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이번 대입제도 개편 추진 계기가 조국 자녀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2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미 작년에 국회 국감에서도 그렇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비교과를 반영하는 부분이 계층의 격차를 더 크게 하고 부모의 힘을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만든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를 계속 방안을 찾고 있었던 중입니다.

○**김수민 의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교육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기존의 문제의식과 정책들 그리고 그 진정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처럼 무리하고 굉장히 성급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의 여론을 무마하려는 일과성 처방으로 밖에는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과 1년 전에 김상곤 장관 재임 시절에 이미 공론화를 통해서 2022년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수민 의원** 이 논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기이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방안 추진안에서도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당시 김상곤 장관이 발표한 대입 개편방안 발표안에는 1년간 폭넓은 의견수렴, 교육전문가의 의견,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논의되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첨예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절충안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제도를 논의하고 결정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치적 변동 상황에 따라 입시제도가 흔들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2022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고 그것은 2022년도에 일관되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표 이후에 비교과 부분을 매우 축소

하고 단순화시켰습니다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컸고 국회에서도 국감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학종과 관련된 불신을 해소해야 된다는 취지하에 정책을 계속 고민을 해 왔고요. 그것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고 우려하고 있는 학종과 관련해서는 그런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 마련돼야 되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장관님 성급하고 잦은 변화는요 그 변화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소유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소수에게 더 큰 특권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조국 장관으로 지금 사회가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 이 시점에서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는 현 정권의 불공정과 편법 그리고 불법의 약점을 대입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에 교착에 의거해서 응당한 처분을 받는지를 감시 감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지적도 충분히 새기겠습니다만 이 제도는 10여 년 전에 시작돼서 이 제도의 불공정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보완이 되어 왔던 제도입니다. 이게 당장 지금의 제도 때문에 생겨났던 일이라기보다는 10여 년 전에 입학사정관으로부터 시작해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생겨났던 문제이고요.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밝혀지고 또 그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계층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진다고 하는 제도는 빨리 대안을 마련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했을 때 대입제도는 4년 전에 예고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크게 제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취지를 살리면서 학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대입제도를, 정말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미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로서의 대입 제도는 저희가 중장기적 과제로 깊이 고민하고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장관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회생을 강요당하거나 환경권·건강권·재산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 문제를 방지하고 방기한 국가는 어떤 존립의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우리 헌법에서는 평등권이 보장돼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 살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평등권도 간접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그런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장관님, 지금 청주 북이면 주민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기로 환경부가 결정했는데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김수민 의원** 청주시 북이면에 5000명 주민이 사시는데요 여기 마흔다섯 명이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암으로 사망한 분들은 60명이고요. 지금 주민 근거지인 피해영향권 내에 하루에 544t의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는 상황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나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그 마을 일대에 소각시설이 아주 과밀하게 설치된 것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중앙 암등록본부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청주 북이면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에 식도암·위암·폐암, 모든 암의 전국 대비 암발생률이 지나치게 높고요. 그중에서도 식도암과 폐암은 아주 경악할 수준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 지역의 소각장 밀집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또 그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

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암종 발생 빈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미 청원을 통해서 주민건강영향평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장관님, 지난 9월 10일에 북이면에서 건강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영향조사 실시 전에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이 영향조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조사 과정은 늘 그렇게 합니다.

○**김수민 의원** 그리고 환경부 소관 법령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지자체 소각장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소각시설이 밀집하지 못하도록 시설 간 이격거리를 좀 두거나 타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부장관님은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적인 제도로 만들게 된다면, 특히 그런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각 처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각이 대부분 공공에서도 합리다만 민간의 시장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지역의 어떤 반입제도를 도입하거나 총량제라든가 이격거리 같은 것을 도입하게 하게 된다면 적실한 곳에, 적절한 곳에 소각장 설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장관님, 특정 지역에 사는 것이 불평등하게 환경의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공정한 환경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울타리는 분명하지만 우리 사회의 선악을 구분 짓고 정의와 불의를 구분 짓는 울타리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달라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임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주승용** 김수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남구·울릉도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남구·울릉군, 독도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의 박명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장관 한 사람의 임명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가 되는 이러한 혼란이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겠지요? 그렇다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진실과 추측과 거짓이 뒤범벅이 된 채로 가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본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총리님의 견해에 일부분 동의하면서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비리와 위선, 불법과 의혹투성이인 후보자를 총리님의 표현처럼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낄 정도인데도 대통령이 결국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임명된 후에도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국민의 56% 이상이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부분적으로 수용합니다.

○**박명재 의원**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기소되고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라니까 피고발자가 되고 이렇게 초래된 이른바 ‘조국 블랙홀’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총리께서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아직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례적인 양상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재 의원** 그러면 무엇이 이례적이라는 말씀이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사안에 대한 종잡을 수 없는 많은 보도들이 쏟아진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이 대단히 많아서 요란스럽게 느껴진다는 것 등등입니다.

○**박명재 의원** 제가요 진짜로 이례적인 일을 몇 가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헌정 사상 장관, 그것도 법무부장관과 그 본인이 가족이 범법자로 몰려 수사를 받고 거기에다가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에게 ‘장관인데’ 하면서 배려해 달라, 신속히 해 달라고 전화한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례적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시겠습니까마는 형사소송법 123조에 따르면 가택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주거주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주가 공공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화를 바꿔 주는 바람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박명재 의원** 총리님, 죄송합니다만……

○**국무총리 이낙연** 바로 그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그래서 총리님께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명재 의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명재 의원** 장관의 통화와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검사가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서, 거짓 해명에 대응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피의사실의 공표에 해당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피의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명재 의원** 피의사실 공표는 영장에 기재된, 적시된 사실을 피의사실 공표했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장관의 전화 여부가 피의사실 영장에

적시되지는 않았겠지요.

자, 그러시고요 그렇다면 장관 집에 자장면을 시켰느니 한식을 시켰느니 또 총리께서 여성만 있는 집에 남자 수사관이 들이닥쳐서 11시간이 넘는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말한 그 가짜뉴스 그것조차도 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보도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명재 의원 오히려 외압을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한 장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공표하는 것이 몇 배 더 사법 정의에 가깝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일 아닙니까?

요 근래 KBS 여론조사 보셨는지요? 조국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가 49%, 지나치다가 41%, 특히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국민 64%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과도하느냐 적절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 직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양쪽이 엇비슷하게 나온다, 어떤 때는 좀 반대쪽이 많게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정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박명재 의원 그리고 더 이례적인 것은 말입니다. 조국 가족에 대한 이 특정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자칭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이 검찰청으로 몰려가 검찰을 갖다 압박하고 또 여당의 당대표·원내대표·당직자,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세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특별 발표를 하면서 불과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적폐 청산의 상징처럼 칭송하고 발탁했던 검찰총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특정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서 분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박명재 의원 글썄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는지요. 왜 모두가 이렇게 야단들입니까?

혹시나 소위 말하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을 갖다가 막으려는 그런 합리적 추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엇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박명재 의원 총리님,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스스로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하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우기다가 부적절하다는 총리님의 지적과 함께 거둬진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서 후회한다고 하더니 또다시 오늘도 인륜과 또 강압 수사 운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역시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부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보다는 덜 절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공인 의식과 공직 마인드가 있는 분이고 과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참으로 이례적인 것은요 인사청문회 도입이 20년이 됐습니다마는 이 정도 조국 후보자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경미한 사안 때문에 수많은 총리와 장관이 낙마하거나 스스로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했는데 아직까지 사퇴도 해임도 없이 버티고 있는 이 자체, 이것이야말로 전례가 없는 극히 이례적인 사항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둬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억측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가닥이 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총리님, 이분이 아직도 검찰개혁의 책임자로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본인이 오랫동안 신념으로 갖고 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국회에 내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 줬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조국 이월 검찰개혁으로 동일시하고 조국 수사 이월 반검찰개혁으로 보고 있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명재 의원**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수사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되어야 하지요. 단지 헌법과 법률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박명재 의원** 총리님, 무릇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개혁을 추진할 장관과 가족들이 피의자와 또 피고발인으로 전락하자 검찰 직원들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가족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검찰수사나 제대로 받으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2000여 검사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검찰개혁에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절반이 넘는 65% 국민들 그리고 수많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학생, 의사, 변호사, 심지어 언론인들이 나서서 조국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의 책임자가 아닌 적폐이자 개혁의 대상, 수사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고 국민들의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가 어렵고 또 피의자 신분이 된 장관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피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총리께서 조국 장관의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엇그제 그 시점에 이 총리가 무슨 일을 했구나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적당한 시기에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느 쪽이냐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국면에 제가 총리로서 어떠한 일을 했든가 하는 것을 훗날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만일에 해임건의권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배우자 구속 시점입니까, 아니면 장관 기소 시점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배우자가 구속되고 또 본인이 기소되더라도 법원 판결까지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두시겠다는 말씀인

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이중·삼중의 가정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명재 의원**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이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그렇게……

○**박명재 의원**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그런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없습니다.

○**박명재 의원** 혹시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교체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박명재 의원** 그래요?

아니면 지금 조국 장관과 동반 사퇴라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그런 논의를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박명재 의원**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명재 의원** 그 취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소신껏 일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압니다.

○**박명재 의원** 그렇습니다. 임기 동안에 임명권자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신껏 일하라는 것이겠지요.

총리님, 지금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검찰총장의 거취를 주시하고 있고 검찰 또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정권을 이기는 검찰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박명재 의원** 제가 지금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까라는 우리 당이 법무부장관의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제 스스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유감스럽겠지만 앉은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중히 제가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피고발자 신분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고 배우자는 기소되고 자녀들도 검찰조사를 받는 등은 가족과 친척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귀하가 앓을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 더 맞다는 여론들입니다.

아직도 법무부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장관직에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당장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지요.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법꾸라지’, ‘조로남불의 끝판’, ‘조양파’ 등등, 제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인 귀하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여론과 평가입니다.

또한 귀하의 제자들은 귀하의 임명은 ‘우리 사회의 가치에 혼란을 가져오고 공정과 원칙, 정의라는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동료 교수들은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조국 장관의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리는지요? 알고 계시는지요?

귀하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 정의부가 미니스트리 오브 인저스티스(Ministry of injustice) 불의부로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편법과 위선을 일삼는 자가 어떻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말인가, 가당찮은 일이다. 조국이란 사람은 후안무치해서 결코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야 한다’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이 끌어내릴 때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탄핵으로 파면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까?

귀하가 셀프 기자회견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늘 어놓은 해명과 변명들이 하나둘 거짓으로 들통나고 밝혀지고 있으며, 귀하의 집을 심지어 위조공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를 지키는 귀하의 이성과 양심과 상식의 기준과 선은 어디까지이며 도대체 귀하의 인간적인 정체성과 인격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입니까?

국민과 함께 묻습니다. 앞으로 배우자가 구속되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습니까? 본인이 기소가 되더라도 법무부장관을 사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며 수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귀하는 조윤선 장관을 향해서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낮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하고 조롱했는가 하면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한 서울경찰청을 향해서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조로남불의 끝판 아닌가요?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 들고 외쳤던 국민들조차 이제 귀하의 장관 임명을 두고 ‘이것은 나라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혹시 엇그제 검찰청 앞에서 벌어진 소위 여당 발 조국 수호 집회를 보면서 고무되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귀하의 집 압수수색 때 인근 주민들이 몰려 나와서 취재진의 접근을 막는 경비원들을 나무라면서 압수수색하고 나온 검찰을 향해서 ‘잘했다, 힘내라’고 환호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동원되지 않은 참된 이웃의 민심이고 진정한 국민의 천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그토록 집착하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결국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현실화됩니다. 그런데 귀하 때문에 우리 당과 다른 야당 반발로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큰 암초를 만나 좌초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개혁’이라는 말에 참으로 실소와 함께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 스스로 귀하를 검찰개혁의 전부 또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조국 곧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이것을 강제 수사 운운하며 마치 인권 탄압이라도 받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사법체계를 폄훼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귀하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검찰수사 과정의 강압과 모멸,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이재수 전 사령관, 변창훈 검사의 치욕과 고통, 인권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셨는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에게 먹살 잡혀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당신과 당신 가족의 허접한 연극무대가 아니다’라는 어느 교수의 칼럼처럼 이제 귀하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사퇴하는 일입니다.

법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민국의 법무부와 검찰을 위해서, 당신이 가르치고 사랑했던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서, 오늘도 장학금을 받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땀 흘리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신을 위해서 한없이 추락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공익을 귀하의 사익에 앞세워 사퇴하는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계시기를 국민과 함께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야말로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주승용 박명재 의원님……

(「수사부터 받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다 하자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박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뀌, 바뀌!」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전수조사 하자, 전수조사!」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 얘기를 듣고 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을 출신 박완주 의원입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국회입니다.

국회는 깊은 정쟁의 늪에 빠져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라는 국가적 대란에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

니다.

청년들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분노하며 공정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력 투입한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 고발인 참 부럽다, 감사의 공문서 위조 의혹 수사에는 비협조적이던 검찰이 사립대 교수 한 명의 사문서 위조 의혹 수사에는 특수부를 투입했다’ 일선 부장검사가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회는 두 쪽으로 분열되고 정치세력 간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오늘로서 16일이 되었습니다. 총 9건입니다. 주변국에서도 이미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과 의심 신고가 계속되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돈농가는 약 6200호로 사육 두수는 1200만 마리 정도입니다. 또한 차량 이동으로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은 현재 총 1383호로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차량 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1차부터 9차까지 발생 농장과 차량 역학관계가 있는 전국 농가 분포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차량역학농장은 중점관리지역인 북부지역권을 넘어 남부권까지 전국에 뻗어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2차 전과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료차, 축산차, 분뇨차의 이동은 가능한 권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학관계상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사람의 통행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차량이 제한구역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각 경찰과 협조해서 제지하고 통행을 못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특히 역학농장이 집중되어 있는 중부권의 충남 거점소독시설이 22곳으로 남부권보다 적습니다. 총리께서는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및 방역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까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9억 원을 지방에 보냈고요. 다른 세원, 다른

재원도 쓰고 최악의 경우에는 예비비까지라도 풀어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총리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게 북부 발생지역 인근을 위험지역, 경기·인천·강원 등 4대 권역을 중점관리지역 그리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중부권과 남부권을 청정지역으로 나눠 방역선을 두었습니다.

먼저 발생지역 농장을 모두 전수조사해서 음성판정이 확정된 농장의 돼지는 발생지역 돼지부터 도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나서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도축하고 비축하여야 합니다. 추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농식품부장관과 상의를 했었는데 고려사항이 뜻밖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예방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강화군의 경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가 있어서 가능하고 그것도 많은 농가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개개 농가와 협의 또는 가격 협상 등등의 거쳐야 될 절차가 꽤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결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계산해 보니 발생지역 147호 21만 두를 35만으로 계산하면 733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완주 의원 특히 충남이 무너지면 확산은 건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현재 역학관련 농장이 밀집되어 있고 더욱 위험합니다. 충남에서 방목 돼지를 자발적으로 선제적 살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축전염병의 체계적 방역을 위해서 방역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부기관의 신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전력을 다 쏟고 그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생 농장들이 대부분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입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 북한이 국제동물보건기구에 ASF 발병을 신고한 직후에 제가 접경지역을 즉 순시하다시피 하면서 농가에 경각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또는 다른 쪽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 방역 협력 제안에 답이 없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희가 두 차례, 말하자면 북한이 발병 사실을 국제기구에 신고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이 났던 9월 17일 두 차례 방역 협력을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박완주 의원 향후 ASF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공동 조사, 공동 방역이 절실합니다.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DMZ 국제적인 평화지대를 언급했을 때 북측과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DMZ 국제평화지대는 이번 유엔 연설과 관련해서 접촉한 일은 없고요, 작년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에서 발표된 군사합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그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히신 뒤에도 북한 측에서 특별히 나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서 논의를 위해서는 모든 라인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 핫라인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핫라인 가동은 또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과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 간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북한 구제역 퇴치를 위해서 방역 약품과 장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고 국제기구나 국제 비정부기구를 통해서 지원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지난해의 경우에는

산림 병충해 방제 그것도 북측 지역 깊숙이 들어오는 것 말고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에 조금, 거기만 이렇게 하게 한다든가 이번 돼지열병에 대해서도 전혀 응답이 없다든가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총리님께서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 재검토 지시한 지, 시한이 10월 23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개도국 제외 기준 네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습시다라는 국익을 맨 윗줄에 놓고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최선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협상 방안을 준비하는 것인데 혹여 포기가 정말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농민이 동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농식품부 내에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만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당장 농작물 관세나 농업 보조금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후 협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 지금 국회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같은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완주 의원 맞습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 개도국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들어가 주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외교·국제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가 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러나 취지와 무관하게 입시 명문고로 전락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자사고가 설립된

지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 10여 년 동안에 자사고나 외교,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등학교가 오히려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2019년도 신입생 기준으로 서울대 41%, 서강대 36%, 고려대 35%, 연세대 34%가 특목고·자사고 출신입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지요.

일반고의 경우 가구소득이 나름대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목고의 경우 가구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 비율이 50%, 자사고도 4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자사고에 고소득층 자녀가 많이 입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고소득층이 명문고를 졸업해 명문대에 입학하고 고소득·고위직 직장에 취업하는 연결고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시다라는 10여 년을 거치는 동안에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 그리고 그것이 사회로 진출해서의 계층 간에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완주 의원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언론사 보도입니다.

2016년 당시 검사 2058명 중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겨우 5개 고등학교의 졸업생만 합해도 157명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현재 1년 특목고 졸업생 수와 일명 스카이 입학 정원과 거의 같아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능력은 모든 학생에게 기대되는 능력입니다. 2015년 국립외교원 제1기 외교관 34명 중 일반고 출신이 무려 22명입니다.

부총리, 본래의 설립 취지가 퇴색된 외교와 자사고는 일몰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로의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학교 유형을 구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별해서 그 학생들에게만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가 개별 학생

하나하나의 능력과 소질을 살릴 수 있도록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들이 실제로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면서도 서열화된 체제들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 방안들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싼 관심은 그래서 항상 뜨겁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대학입시제도의 틀도 수능만 놓고 봐도 94년 도입 이후 25년간 열아홉 번이나 개편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소속 17명 국회의원께서 신입생을 정시 100%로 선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수능 정시 확대 요구는 아마도 한 10여 년간 진행돼 왔었던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의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전형유형별 소득분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높습니다. 바로 다음, 전형유형별 고등학교 유형을 비교한 자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사고·특목고는 주로 수능 위주로 입학하는 반면 일반고는 학생부 입학 비율이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완주 의원 보시다시피 학생부전형은 금수저전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한 정시 100%야말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국·영·수에서 1·2등급이 높은 집단은 서울, 재수생, 사립고, 대도시입니다. 다음, 수능표준점수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완전히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계층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는 논문 발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의 격차가 수능점수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작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

쳤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랬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창의성을 중시하는 혁신교육, 공정교육을 위해 특목고 개혁과 더불어 학종과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안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범국민적 공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작년에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안도 어려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발표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시행되는 대입제도는 그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서 진행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입시가 교육의 목표처럼 되어 있고 이른바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는 학벌 위주의, 학력체계 위주의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가 함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길게 긴 호흡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5년부터 그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과 수업방식을 반영하는 대입제도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28년부터 적용되게 되는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점진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구상하에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다음으로 대학입학전형 중 고른기회전형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이런 자녀들에게 고르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완주 의원 고른기회전형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런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서울의 주요 대학은 고른기회전형 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3.6%인데 고대는 7%, 서울대 5.4%, 연대 5.4%, 소위 스카이라 불리는 최상위 대학이 전국 평균

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고른기회전형의 일정 비율을 법령에 규정하거나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줄이는 등 강제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대학입시가 이렇게 법으로 강제되거나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저희 교육부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할 때 이런 지표들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고른기회전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은 할 계획입니다.

○박완주 의원 이제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76학년도와 86학년도에는 성적 상위자가 서울대를 못 가면 서울 내 사립대가 아니라 지방 국립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서울 내 사립대 배치점수가 지방국립대 점수보다 높아졌고 2005년부터는 그 추세가 공고화됐습니다.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완주 의원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현재 지방 국공립 대학생은 평균 385만원의 등록금 대비 265만 원의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1인당 평균 120만원, 31% 정도를 의미합니다.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고 지방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3031억 원의 재정을 투자하면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무상교육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지방 국공립대를 지역의 연구 또 교육 이런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 국공립대를 지원하는 예산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등록금의 무상화나 전액 장학금 이런 부분들은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대, 국공립대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서 한 번 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의 양심 운운하면서 표창장 발급 사실을 부인하여 검찰의 기소예까지 이르게 했던 동양대 표창장 의혹 사건이 혹시 사전에 잘 짜여진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정은 이렇습니다. 9월 4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이전의 8월 21일 녹취록을 보면, 8월 21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다, 8월 22일 자유한국당에서 입시 비리 의혹 고소·고발 건이 있었고 8월 26일 동양대학교 재단 이사회를 개최했고, 8월 27일 서울에 올라가서 한국당 국회의원 2명을 만났다 등 이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9월 4일 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날 최 총장이 직인 찍은 적 없다며 발급 사실을 부인했고, 마침내 9월 6일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일 전격적으로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합니다.

저 옆에 있는 녹취록을 한번 보십시오. 언론하고 충분히 접촉하고, 8월 21일부터 준비했고 27일 날 서울로 올라갔다. 오비이락인가요?

장관 딸의 표창 위조 의혹이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보도는 봤습니다.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공작 정치가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역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의원 고맙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박완주 의원 대한민국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부모로서 지방에 사는 것이 자식 인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정한 기회였는지 검증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에 자유한국당 등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찬성하였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국회에서 독립된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동료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박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珍圭 의원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경기 시흥갑 출신 함진규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와 외교는 불안하고 경제와 민생은 어렵고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은 불신받고 있고 국민은 분열되고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를 혼란케 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유들입니다.

누구보다 국정 운영의 책임이 큰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께서는 무엇보다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금쯤 되돌아봐야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지요. 아마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발표를 즉각즉각 했는데, 또 웬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누가 조사했던 것이지요?

○咸珍圭 의원 모 언론사에서 발표를, 대통령 지지도가 얼마가 나왔는데 보도를 안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건 언론……

○咸珍圭 의원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국무총리 이낙연 언론사의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咸珍圭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다고 생각……

○咸珍圭 의원 언론사 자체적으로 그러면 보도를 안 한 겁니까? 역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그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합니다.

○咸珍圭 의원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론사 자발적으로 보도를 안 한 건지 만약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안 한 건지 그걸 총리께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정부나 또 각 지자체에서도 잘못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묻는 건 왜 묻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합니다.

○咸珍圭 의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지금 현재는 6개월 보관하고 있는데 저는 10년은 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국회에서 지혜로운 판단 내려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咸珍圭 의원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한 것 말이지요. 저번에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에서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 데 답변하셨지요. ‘여성 두 분 집에 계신데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것 같은, 아무리 봐도 좀 과했다’, 이것 사실과 다르지요, 팩트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보도를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찰에서 다른 해명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더 따져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제하겠습니다마는 검찰의 발표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咸珍圭 의원 그것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나중에 정확……

○咸珍圭 의원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든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닙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咸珍圭 의원 여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때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성 검사분도 계셨고 여성 수사관도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 거주자를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다음에 그 보도가 꼭 맞다는 보장이 아직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威珍圭 의원 저는 이런 것 다 떠나서 과연 검찰이 일반인이나 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배려를 했다고 저는 봐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일반인이나 기업에 이렇게 배려합니까?

법의 가장 중요한 게 공평성이고 공정성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데요 많은 법률가들도 이런 지적은 하고 계십니다. 가택에 대해서 11시간, 지금 검찰은 6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집에 당도해서 떠날 때까지가 11시간인데 그러면 5시간은 어디서 뭘 했는지 등등의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가택 압수수색의 경우에 주거주—가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참여가 안 됐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요. 그런 것을 모두 생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검찰의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威珍圭 의원 아니, 일가족 4명 중에 아들까지 3명이 있고 또 압수수색을 조율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威珍圭 의원 그런데 거기서 수사 검찰이 관동성명을 대면서 보고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 압수수색에서 있을 수 있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충분히 다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 전모가, 판단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법조계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威珍圭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11시간 검찰에서 머물렀지만 실제 압수수색을 한 것은 5시간 내지 한 6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변호인들이 압수 물품에, 압수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했고 또 수사팀의 영장 추가 사유가 있었고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것 등등 해서, 그리고 압수수색 중에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를 했습니

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제반 사정을 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다음에 11시간 중에 실제로 압수수색한 것이 6시간이라고 하면 그 5시간은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뒤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멎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디서 뭘 했는가, 그것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감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威珍圭 의원 내가 총리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의 공정성·공평성 차원에서 일반인들 압수수색할 때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威珍圭 의원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공정하기를 바라구요. 그러나 많은 언론들도 요란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큰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한 것으로 압니다.

○威珍圭 의원 총리님,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기초 원칙이 될 수 있는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내용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威珍圭 의원 그 내용을 대략 제가 말씀드리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같이 동반자로 이끌어 가자.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다. 공정한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威珍圭 의원 지금 국정 운영 2년 반이 넘어가는데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 취임을 잊지 않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威珍圭 의원 소위 친문 같은 현 정부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과 현 정부가 애초의 이런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

각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취임 초기에 비해서 실망감도 더 늘어났겠지요. 그러나 더 초심을 잊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咸珍圭 의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총리의 권한과 의무,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여기저기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咸珍圭 의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고 사실상 본인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줄곧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는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국무총리 이낙연 예,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咸珍圭 의원 대통령과 독대는 얼마씩 자주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필요할 때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례 회동은 다 해서 한 6명 내지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계시고 저가 포함되고요.

○咸珍圭 의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만나시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주례 회동은 매주 월요일……

○咸珍圭 의원 그런 통상적인 만남 말고 그냥 독자적으로 만나셔서 독대하셔서 정국 전반에 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시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매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례 회동 후에 잠깐 따로 뵙거나 또는 행사 도중에 따로 뵙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咸珍圭 의원 총리께서는 헌법에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궐위 시 유고될 때 그 직무를 대행하셔야 하는 막강한 책무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咸珍圭 의원 또 총리가 그렇게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신 경우들이 헌정사에 좀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咸珍圭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이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또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막중한, 고언과 정확한 국민 의사를 전달할 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책임이 일차적으로 총리님께 있다고 봐요.

총리님 말고 허심탄회하게 그런 국민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청와대에서도 여론의 흐름은 그때그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咸珍圭 의원 저는 가만히 이 정국 흐름을 보면서 과연,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직언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시다, 제가 볼 땐. 총리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국무총리 이낙연 뭐 저뿐이겠습니까? 저 또한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咸珍圭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통령이 가끔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국민의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걸 선의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누가 직보를 제대로 안 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를 들어서 경제상황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엄중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국민께 자신감을 드리도록 하는 말씀을 엮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도는 그 전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그런 쪽의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전문을 읽어보면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있습니다.

○咸珍圭 의원 총리님, 임기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咸珍圭 의원 그러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咸珍圭 의원 지금쯤은, 대권 후보로도 거론이 되시는데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총리로 재임하는 한 총리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제 방식은 요란스럽지 않게 결과로 말하는 그런 책임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咸珍圭 의원 아니, 대통령을 적극 돕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되는 길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아까 다른 문제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국면, 국면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걸 훗날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咸珍圭 의원 총리님, 행정각부를 통괄하시고 장관들 지휘 책임이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咸珍圭 의원 최근에 청와대 외교안보실 2차장하고 외교부장관하고 국제회의에 가 가지고 영어로 싸우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咸珍圭 의원 싸우려면 한국말로 싸우면 안 되나요, 못 알아듣게? 국제사회에까지 나가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장관들끼리 서로 싸우는 게 창피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차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咸珍圭 의원 저는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 더 드릴게요.

30대 나이의 청와대 5급 행정관이 휴일에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요? 나가는 총장도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기가 찾아가야지요. 이것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이낙연 꽤 오래된 일인데요. 총장께서 가까이 있는 곳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거기로 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咸珍圭 의원 총리님, 지금쯤 나오실 때 기강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겠습니다.

○咸珍圭 의원 북핵 문제, 미사일 발사, 과연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향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끈질기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咸珍圭 의원 저는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전쟁 관련 또는 역사적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면 우리 정부든, 우리 우파 정부든 좌파 정부든 저는 큰 실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적어도 더 잘 하시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일어나 보면 마치 딱총놀이 하듯이 그냥 쏘대요.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이제 하도 많이 쏘 대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북한 나름의 판단 같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咸珍圭 의원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속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군사 강국을 준비하면서…… 70년 속았으면 됐지 어떻게 더 속아야 됩니까?

저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이게 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대통령을 아예 조롱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도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이미 보셨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비 증가율이 과거 어느 정부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방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고요. 평화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咸珍圭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핵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60년대 이후부터, 6·25 전쟁을 읽어 보면 핵 개발의 유훈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한 유훈이 있어요. 땅을 치면서, 전쟁에 지고 나서, 유엔군 참전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게 유훈이고 비핵화 유훈도 또 있습니다.

비핵화 유훈, 이것 뭐라고 했어요? 92년도에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 공동성명 발표 당시 ‘우리는 핵을 안 만드니까 남조선에 있는 미군들, 핵무기 다 철수하라’ 그것 요구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수령님 유훈의 근거다’, 이것 아직 유효하십니까? 비핵화 유훈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핵을 만들었어요, 지금.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차례 약속한 것도 사실입니다.

○咸珍圭 의원 제가 또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일파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咸珍圭 의원 그러시지요? 일본 특파원 하셨고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咸珍圭 의원 혹시 일제의 피해를 집안에서 받으신 적이 있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 가족 중에는 없습니다.

○咸珍圭 의원 없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咸珍圭 의원 제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송구스럽지만 유일하게 일제 징용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제가.

제가 친일파입니까?

거기 안 계시네요. 어디 가셨는데, 나간 것 같은데……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咸珍圭 의원 제가 친일파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咸珍圭 의원 우리 자유한국당보고 친일파라면 저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의원들, 너네 아버지 뭐 했냐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 징용 갔어요. 누나 죽었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저는 정부의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咸珍圭 의원 총리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이 다 말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咸珍圭 의원 제가 친일파는 아니에요.

(○박범계 의원 의석에서 — 빼고.)

박범계 의원 가만히 계세요, 좀. 대전 동구인가요? 좀 가만히 계세요.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대일 관계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나, 우리가 싸울 여력이 저는 아직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아버지가 거기 가서, 나가사키 협회에서, 미쓰비시에서 죽다 살아 돌아오셨어요. 걸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피해자인 제가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건 이런 식으로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내공을 좀 키워서 싸워도 한번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이번 일은 저희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우리 한국의 오래된 입장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법원의 판단을 경제로 보복하려고 일본이 했던

것이고 또 그냥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상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또 나중에 붙이고 그런 과정들은 일본이 잘못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대응도 좀 더 나왔더라면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싸움의 시작은 한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咸珍圭 의원 저는 싸움은 해도 지혜롭게, 핀란드마냥 지혜롭게 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무총리 이낙연 예.

○咸珍圭 의원 그다음에 제 지역을 말씀드리어서 죄송합니다만 시흥·광명지구라고 아시지요, 525만 평?

○국무총리 이낙연 예.

○咸珍圭 의원 이것 이미 2010년도에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관계부처가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얼핏 보고를 받았습시다만 그 협의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咸珍圭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咸珍圭 의원 고맙습니다.

유은혜 장관님!

저기 방청석에 학생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문제 많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앞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신 말씀처럼 수시, 특히 학종에 비교과 부분이 반영되면서 여러 가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咸珍圭 의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면서 시험도 한 번도 안 치르고 간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시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학종과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국민적인 불신들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咸珍圭 의원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국 장관님!

여러 의원들이 하도 많이 질의를 하셔서……

장관 되시리라고 생각을 좀 하셨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예?

○咸珍圭 의원 장관 되시리라고 생각은 좀 하셨었어?

○법무부장관 조국 그것 생각을 못 했습니다

○咸珍圭 의원 못 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咸珍圭 의원 본인이 하셨던 말씀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인사 검증했던 것, 제가 이게 면면을 보니까요 진짜 억울한 사람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지하게 많습니다. 낙마된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고요, 별것 아닌 것 갖고도요. 그렇지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예.

○咸珍圭 의원 그분들한테 좀 사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법무부장관 조국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咸珍圭 의원 그리고 저는 장관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소중하다고 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가족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 말고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꼭 장관 아니더라도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조국 유념하겠습니다.

○咸珍圭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주승용 함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원주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 원주를 출신 송기현 의원입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영국의 정치인 액튼 경의 말입니다.

절대권력은 견제받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모두는 그 분노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순간이라도 검찰개혁의 과제를 늦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제한의 수사권을 외부적 견제 없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의 수사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역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등 공안물이 사건들,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MBC PD수첩 사건과 같이 정권에 입 맞춘 하명사건들, 모두 아무 견제 없이 절대권력을 행사하였다가 줄줄이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입니다.

반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세월호 사건, 고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을 비호하며 부실한 수사를 하여 지금까지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선 국무총리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전 함진규 의원께서 물어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송기현 의원 배우자는 압수수색 시작 전에 제시된 영장을 변호인이 읽고 있는 도중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고 합니다. 당시 배우자는 이후 압수수색 중에도 여러 번 주저앉고 헛구역질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총리님, 검찰은 ‘여성 두 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열한 시간이 아니라 여섯 시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총리님께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찰과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온당치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더 따져 보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자제하겠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송기현 의원 압수수색 당시에는 처음에는 배우자와 딸, 아들이 있었는데 변호인 한 사람이 나가면서 아들이 나갔고 그 이후로는 내내 배우자와 딸이 있었습니다. 여성 두 명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보도에 따라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따져 볼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 수색을 하면서도 추가영장을 신청했다고 하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송기현 의원** 추가영장 발부 이전에 1차 영장 수색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색팀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 보완영장인지 추가영장인지가 나올 때까지는 그 자리를 비켜 주는 것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분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했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일이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현 의원** 여러 가지 따져 볼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할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는, 추가영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부실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걸쳐서 추가영장을 받았습시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먼지떨이식 압수수색입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송기현 의원** 검찰이 부실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두 번이나 다시 추가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바로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과도하다는 느낌을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만 그것도 특정 사건의 수사에 관계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송기현 의원** 알겠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과정하고 집행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법무부장관 조국** 예.

○**송기현 의원** 검찰개혁의 핵심이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주승용 부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법무부장관 조국** 궁극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현 의원**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원래의 기관은 경찰입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예.

○**송기현 의원**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검찰이 무제한의 수사권을 갖고 있게 된 것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 어떻습니까? 어떤 배경인가요?

○**법무부장관 조국** 일제의 무단통치로부터 해방하면서 당시 해방된 대한민국의 경찰분들이 다수가 일본경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당시 국민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의 감독을 받도록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를 하였고요. 그 당시에도 국회의 기록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한다고 당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 맞습니다. 그것이 1954년 1월 9일에 제2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예.

○**송기현 의원**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의 경찰에 관한 기억 때문에 한시적으로 검찰에 주도적 수사권을 주어야 된다고 했었고 다만 그 당시에 국회뿐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겨만 검찰총장까지도 ‘장래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맞습니다.

○**송기현 의원** 그로부터 65년이 지났습시다. 지금은 20대 국회입니다.

장관은 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첫째,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자신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즉 수사를 하게 되면 유죄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한 사람의 확증편향을 기소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확증편향을 해치는 어떤 사실, 증거의 경우는 배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고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증거나 진술은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궤방이 된다고 통상 보고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 맞습니다. 장관도 조서를 꾸민다, 뽕뽕 만다 이런 표현도 들어보신 적 있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많이 들어 봤습니다.

○**송기현 의원** 기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가 기소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별건수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예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그래서……

○**송기현 의원** 이게 나라나 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에도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의 성실한 지방검사인 게리디언이 차량강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톰크스를 기소했는데 혈액검사 결과 범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은폐한 채 재판을 진행해서 이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사카 지검의 특수부 에이스 검사인 마에다 츠네히코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플로피디스크를 조작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 가깝게 우리나라를 보면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유명한 사건들, 모두 누군가를 기소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한 다음에 기소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줄줄이 무죄가 난 것입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서를 꾸민다고 하게 되면 조서를 꾸밀 때 기소가 가능한 방향으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실체나중에 그 조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왕왕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된 많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 검찰의 막강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직접수사를 줄여야 된다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 그리고 현 윤석열 총장님도 이런 직접수사 총량의 축소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법무부에서도 이런 방향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 기소도 담당하기 때문에 병폐가 있으므로 일단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오히려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그 수사의 적법성이라든가 또는 기소 관련해서 보충이 필요한 수사를 지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경찰과 검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검찰수사의 적법성, 준법성 같은 경우도 확보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 조금 더 나가서 지금 사개특위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보면 아직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안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되는데 현재 당장 분리 못 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를 국회에서 잘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기현 의원**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불기소에 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의원** 잠시 들어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다시 총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면 당사자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미법 국가에서는 중죄의 경우에는 기소를 검사한테 맡기지 않고 대배심을 통해서 기소하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1989년에 있었던 우지라면 사건 혹시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잘 기억……

○**송기현 의원** 라면, 우지라면 사건. 그 당시 비식용 우지를 수입한 삼양식품 등의 5개 회사의 대표하고 직원 10여 명이 구속되어서 재판은 8년을 끌었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 우지파동입니까?

○**송기현 의원** 예, 우지라면 사건.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입니다.

결국 1997년도에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8년 동안 검사의 일방적인 기소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회사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 그 결과 국내 라면시장의 판도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송기현 의원 하지만 검사들 중에서 이 사건으로 책임을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총리님, 아무런 견제 없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무리하게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혁 방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방법은 국회에서 지혜를 짜 주시기 바랍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이 기소의 실적으로 역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지파동 때 그 피해자들의 피해는 그러면 어떻게 누가 보상할 것인가 하는 건 대단히 막막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현 의원 총리님, 검사는 언제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교과서적으로는 범죄의 증거를 상당한 정도까지 확보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송기현 의원 범죄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송기현 의원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유죄 입증 가능성이 판단이 있어야 기소를 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얘기 많이 들어 봤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송기현 의원 공소장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서죄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고 작성 일자가 언제고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가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증명될 수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잠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시고요.

지난 9월 6일 날 기소되면서 제출된 이 공소장에는 작성 일시가 2012년 9월 7일 자, 방법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후 총장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일 만에 전혀 다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작성 일자는 13년, 작성 방법은 ‘피고인이 아들 표창장을 스캔한 뒤에 상장에서 오려낸 직인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위조했다는 표창장의 원본이나 표창장의 사본이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사건 기소 당시에 사문서 위조의 일시·방법·위조행위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보도만 봤습니다만 그것도 자세히는 못 보고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라는 것이 공소장으로서의 매우 이례적이다 하는 지적을 본 적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대로라고 하면 기소될 당시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냥 공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명백한 기소권 남용입니다. 저는 이 사건 기소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니체는 ‘사람은 감정으로 먼저 결정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소는 목적을 가지고 먼저 기소를 하고 그 기소가 정당하다고 맞추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지난주에 이태규 의원님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번 일들 가운데 가짜도 있다고 하는데 가짜의 증거가 뭐냐고 저한테 하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이 ‘표창장에 관한 보도가 예전 보도와 그 나중 보도가 서로 다르니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발원지가 바로 공소장이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송기현 의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우리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을 처벌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의원 법무부의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사건에 대해서 혐의사실, 수사사항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네 가지 경우 예외적 공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기현 의원 공보관 아닌 사람들은 언론에 접촉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원칙적으로는 공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언론기관과 접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 이 준칙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 해서 감찰을 하고 그 공개의 경위, 내용 등을 조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까지 해 왔던 대표적인 악습 중의 하나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해서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수사 목적을 달성하였던 것이 악습 중의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수사 관행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요. 즉 과거 관행이 어땠나 하면 영장발부등 강제수사를 할 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유죄 심증을 대중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이후 재판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유포하는 그런 일종의 관행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송기현 의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인데 총 93명이, 한 해 평균 8~9명 정도 되는 사람이 검찰수사 중에 자살했습니다. 검찰의 무차별적인 먼지 털기식 수사하고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밀 누설 이런 것 때문에 인권이 유린된 결과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장관 조국 그 점에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난번 전

임 장관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수사공보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도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데요. 의견 수렴이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빨리 발효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현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유포한 사람을 확인해서 처벌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1985년도에 동경지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 같은 보도가 났을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의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예.

○송기현 의원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그리고 지금 현재 공보준칙에는 감찰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징계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이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26일에 주광덕 의원께서 장관하고 압수수색했던 검찰 관계자하고 통화했던 내역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사실 저희 당은 이것을 통해서 검찰과 야당이 야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어제 더 심한 것이 나왔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사건에 관해서 주광덕 의원께서 9월 4일에 의혹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당 의원하고 최성해 총장하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을 본다면 검찰·야당이 서로 짜고서 기획수사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의심이 듭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송기현 의원 다시 한번 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중에 일부이고요. 그중에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거나 제출

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나 문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된 것처럼 나와 있는 보도들을 제가 뽑아 왔습니다. 이런 것은 검찰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보도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명백하게 피의사실 공표하거나 아니면 수사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법과 준칙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비웃듯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참 오래된 적폐입니다. 일부 검사들과 일부 언론의 공생관계는 참으로 오래된 부끄러운 유산입니다.

○송기현 의원 기본적으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총장이 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번 수사에서도 검찰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악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던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밀 유출, 과거 악습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도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들의 일상에 어떠한 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시고 그래서 바로 검찰개혁 요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기현 의원 어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지지를 하셨고. 윤석열 총장도 오늘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서 단호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총리님께서도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의원 총리님, 이번 조국 장관 가족 사건에 대해서 총 몇 군대를 압수수색하고 몇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엇그저께 이춘석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띄워 주신 것 보면 70건이 그때 넘었던 것 같습니다만……

○송기현 의원 마흔두 군대를 압수수색하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만 영장이 70개가 넘습니다.

한 가족에 관련된 사건에서 이 정도로 한 사례가 있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송기현 의원 저는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악습으로 해 왔던 먼지떨이식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들 관련된 부분은 별건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칠 만큼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역설적 상황을 검찰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기현 의원 총리님,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세월호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하였다면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심각한 처의 상태를 고려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비교하긴 뭐합니다마는 훨씬 더 직접적인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네요, 아까 검사장 말씀이.

○송기현 의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사 외압입니다, 법무부장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송기현 의원 저는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27년을 법조인으로 살았습니다. 27년 내내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면서 검찰은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개혁의 목소리가 끊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조국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의 모습은 검찰 전체의 모습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혁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숙 의원 의석에서 — 이주영 부의장님,
진정성 있고 공식적인 사과하십시오.)

○부의장 이주영 송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성산 출신의 정의당 여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창원 성산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오늘로 꼭 국회에 들어온 지 180일이 되었습니다. ‘여 의원, 국회 가면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하던 유권자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속에 패스트트랙의 한복판에 서야만 했습니다. 합법적 입법 절차가 물리력으로 막히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날 선 말들로 정쟁만 난무하는 여의도 정치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이 조국 대전의 맞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니 당명에서 ‘정의’를 빼라는 온갖 조롱 섞인 비난을 들을 때면 참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동물국회로 조롱받는 지금의 20대 국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금의 검찰수사에서 보듯이 지난 4월 정의당이 당운을 걸고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도 있었지만 따끔한 비판과 질책도 많았습니다. 6석 정의당에 60석 이상의 무게감을 주시며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비판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정의로운 길을 걸은 적이 없는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을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일관되게 기득권 타파와 불평등 해소,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 더 많은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개혁 전선 맨 선두에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선두에서 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앞서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길에 어제 3800여 명의 시민들께서 집단 입당으로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이

힘을 모아 반드시 정치개혁으로 민심을 담은 국회를 만들고 사법개혁으로 법집행이 만민에게 평등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년 전 이 자리, 각 당 원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1700만 촛불에 화답이나 하듯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를 쓰고 자기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그 부모들의 마음, 수많은 경쟁을 뚫고서도 비정규직으로 취직해야 되는 청년들의 아픈 마음, 대학 입시 논쟁에 끼지도 못하는 고졸 청년들의 마음, 그들이 들었던 촛불에 국회는 어떤 응답을 했습니까?

국민 70%는 땅 한 평 없지만 상위 1%가 개인 소유 부동산의 46%, 상위 10%가 84%를 가진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계층 이동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교육마저 기득권 대물림 수단이 되어 버렸고 국회는 손놓고 있었습니다.

국회는 자기 할 일을 방기한 채 온통 지금 조국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 기득권 대물림, 교육 불평등이 해소되니까?

(「해소돼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삭발하면 청년들의 분노와 실망감, 상실감이 해결되니까?

대한민국 학생 4.6%만 갈 수 있는 특권 학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대물림 통로가 된 특권 학교를 아예 제도적으로 영구히 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악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역주행하면서 교통법규 준수하라고 손가락질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과정을 전수 조사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을 이런저런 핑계로 건너쳐 버린 자유한국당의 꿈수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

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회는 청년들의 촛불에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 서초동 촛불의 머리 숫자가 얼마나 하는 논쟁을 거두고 사법개혁 요구에 책임 있는 입법으로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이런 것 좀 걱정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31년 전 조선 국회의원 노무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또 노무현은 이 자리에서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15살 문송면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한민국은 31년 전 대한민국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문송면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황유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 군으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으로, 신숙 배달에 목숨을 잃은 배달앱 청년 노동자로 다시 이 세상에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5월 1일 노동절, 삼성 조선 타워크레인 붕괴로 6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삼성 중공업에 고작 벌금 300만 원 판결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고작 50만 원입니까?

더욱 슬픈 것은 사람 목숨값에도 차별이 있고 죽음에도 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김용균 사망의 구조적 원인, 바로 위험의 외주화였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지만 기업 살인에 책임 방기로 동조했습니다. 그렇기에 1988년 문송면의 불평등한 죽음이 그렇듯이 30년 뒤 2018년 김용균의 불평등한 죽음 또한 사회적 타살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면서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978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외치면서 구사대의 똥물 폭력에 맞서 웃옷을 벗고 나체 시위로 싸워야 했습니다.

2019년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과 불평등 앞에 법을 지켜 달라는 전태일의 외침,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톨게이트 수납 여성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지켜 달라며 상의까지 벗어 가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고집하는 것이 40년 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해졌던 똥물 폭력과 과연 무엇이 다르니까?

2010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3대 정부를 거치며 11번의 법원 판결을 받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47일 동안 곡기를 끊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노조 파괴 전문 집단 ‘창조컨설팅’에 맞서다 13년 전 영남대의료원에서 해고된 2명의 간호사가 7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90일 가까이 농성하고 있습니다. 영남대의료원은 노동청의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 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들도 정부 지침을 지켜 달라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전당이라 말하는 대학 내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더운 여름, 추운 겨울 쉼 공간도 제대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동부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 ‘정부 방침을 지켜 달라’, 지금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3년 전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분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 하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집권 여당 의원 여러분!

다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정부의 지침, 법원의 판결만이라도 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의 삶에 정부와 법과 제도가 힘이 되어 주도록 정부와 집권 여당의 대결단을 촉구드립니다.

시간이 짧게 남았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여영국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많은 현장에서 법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구 같지도 않은 요구를 걸고 국기를 꿇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상황을 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왜 법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들 경우에 있어서 실제 대법원 판결 관계와 별도로 그 회사에서의 노사 협상 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용노동부 소관 사안이라서 법무부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가 약간 조심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영국 의원 우선 부처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법집행의 문제입니다.

사법개혁이라는 게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가슴 속에 정말 법집행이 공평하고 평등하다 느끼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

○여영국 의원 법집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문제가 뭔지 잘 점검해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법집행의 형평성을, 공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총리님 잠깐 뵙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산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 삼성 조선 크레인 참사, 올해 벌써 16명의 노동자가 죽어 간 우체국택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 또 김용균 청년의 죽음, 그 모든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다 진단을 했습니다. 국가가 구성한 조사단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왜 지금 이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김용균특조위의 권고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행하도록 관계부처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또 법에 대해서도 김용균특조위가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만 국회에 그 법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시면 정부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회

탓만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그 입법이 필요하다 싶으면 정부입법으로라도 정말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뭔가 대책,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산업안전법이 어렵사리 만들어졌습니다, 노동계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법입니다만. 그러나 국회는 또 여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큰 재해에 대해서는 기업에 책임을 더 크게 묻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로 하여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금 법원의 판결, 정부의 방침이 특히 공공기관·공기업 사장에 의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해임 조치를 통해서 뭔가 정부의 의지를 더, 집행 의지를 밝힐 의사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노사 간에 충분한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법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봐 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총리께서 그동안 이런저런 상황들 보고만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 직접 가실 의향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언제 기회가 되면 가 보겠습니다. 저도 많은 현장을 다닙니다마는 우연하게도 노동의 현장에는 좀 덜 간 편입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영국 의원 덜 간 게 아니라 거의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그 현장만이라도 꼭 좀 방문하셔서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총리께서 꼭 좀 나서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기억해 두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들어가십시오.

평범한 노력이 부모 배경 갖든 대학교 졸업장보다 높게 평가받고 어떤 일자리에서든 안전하고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부, 더 이상 주춤주춤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고 본질적 개혁에 착수해 주십시오. 그것이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주영** 여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현안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이 한동안 진척이 없다가 지난 9월 21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군위·의성 군수가 주민투표 찬성률로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4개 지자체 단체가 합의를 했습니다. 곧 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선정 시한인 올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정위원장인 국방부장관의 그 합의안에 대한 검토 또 일부 주민들의 이견 등으로 자칫 부지 선정이 해를 넘기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4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 대로 연내에 이전 부지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감사합니다.

어제 김광림 의원께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 2명만 있는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던 총리님 발언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해 봤느냐’ 이렇게 여쭙았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엇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강효상 의원** 하루가 지났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직 충분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찰에 그것을 보고하라고 그러면 또 수사 외압이라 그럴 거고요……

○**강효상 의원** 아니, 오늘 언론에 가짜뉴스 팩트 체크가 났습니다. 어찌 됐거나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은 맞지요?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잠깐만요.

조금 전에 송기현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효상 의원** 투입된 검사들 중에 2명이 여성이 있었고요. 수사관 4명 중에…… 2명이 여성이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한테 여쭙보면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강효상 의원** 제가 이따가 여쭙보겠습니다.

그때 아들이 계셨습니까, 조국 장관님? 현장에 아들 계셨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창취 불능)

○**강효상 의원** 예?

(「이따가 질문을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것 간단한 팩트 확인인데 어제 김광림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총리님께서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시고 우롱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강효상 의원**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총리님께서, 일국의 국무총리고 제가 존경하는 언론계 선배님께서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려 가지고 하루이틀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은 인격에 대해 상당히 의심이 가는 이런 문제입니다.

총리께서 진솔하게 그러면 언제까지 확인해서 언제까지 사과를 하든 확인을 하든지 한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 전반에 대해서 따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의 설명이 있었는데 충분치 않다고 보고요.

○**강효상 의원** 아니, 그때……

○**국무총리 이낙연** 잠깐만요.

○**강효상 의원** 여자 둘 외에 여성이 더 있었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요. 거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요.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여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도 검사고 검찰수사관이잖아요.)

조금 전에 조국 장관에 따르면 아드님이 있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인과 따님만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강효상 의원 오늘 아침 언론 지적에는 이렇게 총리께서 나서서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학자 한 분은 ‘괴벨스식 언론조작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듣지 않도록 유념해서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박홍근 의원께서 ‘조국 임명하든 윤 총장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총리께서 거기에 가부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검에서는 이것을 부인했어요.

총리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효상 의원 그러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도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강효상 의원 예?

○국무총리 이낙연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강효상 의원 아니, 확인이 어렵다니…… 이렇게 자꾸 말씀을 돌리시니까 자꾸 가짜뉴스가 퍼뜨려지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강효상 의원 아니, 대검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대검이 산하기관 아닙니까?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이 상황에서 가장 정직하게 드리는 말씀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효상 의원 총리님, 그렇게 스핀 닥터(spin doctor)처럼, 일국의 총리께서 무슨 정치공학적인 스핀 닥터처럼 그렇게 처신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나 있는 얘기입니다.

○강효상 의원 아니, 그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효상 의원 참 기가 막히네요.

아까 송기헌 의원께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언론 및 속보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검찰에서 고의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총리님께서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고 이것은 적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검사와 일부 기자들의 공생관계는 오래된 부끄러운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효상 의원 적폐라고 그러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적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강효상 의원 예, 적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 수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럴 생각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 그러면 지난 박근혜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윤석열 특검의 수사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보도들, 추측보도, 가짜뉴스도 있고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폐였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물론 행태가 같다면 어느 정권이나에 관계없이 나쁜 것은 나쁜 거지요.

○강효상 의원 5공 말 19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그때 검찰이 리크(leak)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그 관계는 모르겠고요, 특종 취재했던 기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그 기자가 다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나중에 정치인으로 바뀐 검사가 어떻게 리크했다라는 게 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적폐였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언론계 출신께서 기자들의 보도에 대해서, 기자들이 열심히 밤을 새서 취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실망과 정말 한탄,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강효상 의원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감사합니다.

○강효상 의원 법무부장관 나오세요.

우선 간단한 팩트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에 ‘조 장관, 조국 수사팀 파견검사 원대복귀 검토 논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0여 명 파견된 검사 승인을 한 달마다 하는데 조 장관이 안 할지도 모른다. 원대복귀할지 모른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조 장관 생각 어떠세요?

○**법무부장관 조국** 그 보도 얘기 지금 처음 듣습니다.

○**강효상 의원** 그러니까 연장하실 생각이시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내용 자체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증권업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런 검사가 파견돼 수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검사들이 원대복귀한다면 이것은 마치……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개혁 작업도 오해받을지 모르니까 수사 뒤에 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효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 닉슨이 특검 수사팀을 축소하고 방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해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 방해할 안 하겠다 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고……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취임 전부터도 마찬가지로 지지만 취임 후에도 제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지휘·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공언을 해왔고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몇 가지 팩트 확인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규근 총경과 찍은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정상훈과 윤규근 총경의 밀접한 관계 같은 것 보고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았습시다만 정 모라는 사람은 저는 알지도 못하고……

○**강효상 의원** 그걸 제가 여쭙본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강효상 의원** 윤규근이 정상훈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한 그런 사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혹시 윤규근 총경은 잘 아시지요? 청와대

에 같이 근무하셔서,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하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 저 사진 찍어 준 것을 검찰이 리크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제가 최초 공개한 언론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상훈의 지인에서 이것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강효상 의원**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단회식을 할 때 각 구성원들과 다 찍었던 사진이고 특별히 윤 모 총경과 제가 개별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강효상 의원** 알겠습니다.

윤규근 총경에게 혹시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편드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강효상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윤규근과 정상훈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동생 조권 씨하고 요즘도 가끔 연락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제 동생이니만큼 가끔씩 연락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지금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그 혐의가 뭔지 한번 여쭙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았고 변호인을 통해서 요지는 들었습니다.

○**강효상 의원** 요지는 들으셨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강효상 의원** 여러 가지, 건설업자에게 7000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교직에 대해 채용비리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여쭙보고 싶은 것은 조권 씨가 부산의 용호동에 살았습니까, 용호동?

○**법무부장관 조국** 잘 모르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모르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예.

○**강효상 의원** 동생 주소지나 부산의 어느 쪽에서 주로 활동하셨는지 모릅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주로 해운대 쪽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그래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강효상 의원 용호동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용호동에서 아주 유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오셔서 혹시 조권 동생분하고 업무에 관해서 서로 연락하신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전혀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 뭘 좀 알아보라든지 그런 것은 없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전혀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 동생분께서 지인들에게, 조 수석께서 경찰에서 쓸 만한 승진 대상자들을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동생분이 경찰들과 여러 명 접촉을 했고 거기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시다.

○법무부장관 조국 금시초문입니다.

○강효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한 석간 보도에 따르면 장관님 따님이 서울대 의대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지요? 낙방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그런데 1차 합격에 대해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점수가 안 됐는데 합격이 돼서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났습시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서울대 입시 내용을 제가, 왜 떨어졌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강효상 의원 서울대학의 의대 교수님들하고 많이 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강효상 의원 많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예.

○강효상 의원 그래도 몇 사람 계시겠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캠퍼스가 떨어져 있고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의대 교수님들하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 그런데 또 서울대학이 총장 선거가 요란하지 않습니까? 의대에서도 많이 출마도

하시고.

○법무부장관 조국 저는 총장 선거캠프에 합류한 적이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 혹시 여쭙습니다. 혹시 따님의 서울대 의대 지망 때 서울 의대 어느 교수님에게 우리 딸이 지망했다든지 좀 한번 챙겨봐 달라는 이런 거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명에 앞서 사재를 기부하겠다고 그러셨지요, 사재?

임명받기 전에 전부 기부하시겠다 그랬지요? 웅동학원, 여러 가지 직책도 다 그만두고.

○법무부장관 조국 예.

○강효상 의원 어머니께서 웅동학원 직책 지금 그만두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지금 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하셔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아직 안 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강효상 의원 그것 좀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수사 관련이 있어서 이게 마무리되면 제가 장남으로서 그 문제를 챙겨 볼 생각입니다.

○강효상 의원 웅동학원 재산도 다 기부하시겠다 그러셨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재산 자체가 기부가 아니라 가족들이 다 빠지게 되면 기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가족이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강효상 의원 지금 웅동학원에 남아 있는 재산이 동생의 이혼한 전처가 가진 20억 상당의 채권인데 이것도 기부 대상입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일단 제 동생이 갖고 있는 채권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제수씨 같은 경우도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은 못 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위장 이혼이 아니라면 사실 이 건 남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재산에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셨던 10억 5000만 원도 기부하실 예정이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강효상 의원 기부하시겠다, 10억 5000도?

○법무부장관 조국 ……

○강효상 의원 이런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언론계에서는 이런 의혹이 있다. 12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이나 몇 달 지나서 현금이든 수표든 되돌려 주고 그다음에 그 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몇 배로 차익을 해서 되돌려 주겠다라는 어떤 어떤 간에 합의가 있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강효상 의원 알겠습니다.

전에 5촌 조카 조범동을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다, 그렇게 가깝지 않다 이런 취지로 그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 의원 한두 번 보는 사이다.

○법무부장관 조국 제주, 종손이라서 제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강효상 의원 그런데 재산 공개 때 조범동의 부인 이은경 씨입니까, 그 부인에게 5억 원을 빌려 주고 다시 받은 적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제가 그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강효상 의원 그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5억 주고 받는 데도?

○법무부장관 조국 저희 집의 재산 문제는 제 처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강효상 의원 부인이 다 하셨다?

○법무부장관 조국 그렇습니다.

○강효상 의원 5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 교수님은 남편한테 일체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저희 집은 아마 500만 원 정도면 저한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집안의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제 집의 재산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거의 관리를 하지 않고 제 처가 전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강효상 의원 그 기부 대상에 90년대 중반에 태광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15만 볼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그렇게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킵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질의하세요, 정책질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부인께서 14명이 넘는 검찰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습니다.

선임비는 얼마 정도라고 들으셨어요?

○법무부장관 조국 그걸 여기서 제가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이것도 수억, 아마 최소 1억…… 기부를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넘을 테니까 거의 1억이 넘을 비용인데 이것도 어떻게 기부 대상에 들어가는지도, 기부 다 한 다음에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시는지……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제 가족의 변호사 비용을 여기서 왜 공개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은 매일 매일 놀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 장관, 촛스키 아시지요, 보스턴의 촛스키 교수?

○법무부장관 조국 예,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저는 우리 조 장관을 촛스키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참 이게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소금이 아니라 이게 아주 흙보다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거지요. 본인도 스스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그렇습니다. 저도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인격 모독하지 마세요. 그렇게 모독해도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인격을 존중하세요, 인격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강효상 의원 개혁은 우리가 개혁의 자격이 있는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하시든지!」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 조국 말씀의 취지 새기겠습니다.

(「인격은 존중을 해야지요, 기본적으로!」 하는 의원 있음)

○강효상 의원 김우창 교수 아시지요, 고려대

명예교수?

(「끝났으면 빨리 끝내요, 들리지도 않는데,」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 조국** 예, 어떤 분인지는 압니다.

(「질의다운 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강효상 의원** 존경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효상 의원** 이분께서 칼럼을 썼는데 ‘조국 논란, 윤리적 책임 잇은 권력이 정의 외쳐 봤자’ 이렇게 쓰셨고요.

(장내 소란)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증거 불충분 이유 정당화는 곤란하다. 법치주의 아래 도덕적 근거 필요하다. 권력의 거짓 명분 허상은 그만되어야 된다. 정부는 현실 윤리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윤리적인 그런 기반만 있으면 저는 현행 청문회 제도상으로 장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 장관께서는 지금 너무 많은 게 드러나셨어요.

(「부의장님, 정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사회 좀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과연 일선 검사들이, 검찰개혁을 외치시지만 과연 그 검사들이 조 장관이 하는 개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조국** 말씀 새기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주영**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곧 인격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효상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에 와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빨리 정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뭐 하시는 거예요? 부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끝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직권 남용에 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말씀을 드립니다.

(「엇그제 것 제대로 사과도 안 하셨는데!」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 발언 하셨으면 마무리하고 들어가셔야지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영** 마무리 좀 하세요.

○**강효상 의원** 한투의 김 모 PB하고 댁에 같이 계실 때 ‘아내를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하셨습니까?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 조국** 그렇게 말한, 의례적 인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효상 의원** 의례적 인사?

○**법무부장관 조국** 예.

○**강효상 의원** 그 이틀 뒤에 설렁탕은 같이 드셨어요?

(「부의장님, 지금 어떻게 의사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 조국** 짧게 밥을 먹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강효상 의원** 설렁탕 드셨다?

○**법무부장관 조국** 예.

○**강효상 의원** 알겠습니다.

(「14분으로 시간 정했으면 지켜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도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증거 인멸과……

○**법무부장관 조국** 의례적으로 만나서 의례적으로 인사하고 헤어졌던 것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의장님, 사회 똑바로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강효상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예의 좀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정부 여당의 검찰 겁박은 마치 도둑이 수사하는 경찰을 겁박하는 모습입니다.

(「부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는 의원 있음)

법치주의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에게 기어이 사람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정부 여당은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홍위병 패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부의장님, 회의 정리하세요. 몇 분입니까,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검찰은 전 정권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지금은 살아 있는 권력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지금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주영 마무리하세요.

○강효상 의원 그런 윤석열이야말로 사법개혁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개혁의 주체는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온갖 방법으로 사익을 굶어 모은 조국이 아닙니다. 개혁의 진짜 주체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시장경제 질서 교란에 철퇴를 내리는 윤석열 총장입니다.

(「부의장님, 회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시고!」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이 사법개혁의 책임자라는 말은 정확히 두 달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 인사들이 윤 총장을 지지하며 했던 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의장님, 도대체 어떻게 회의 진행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주영 강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강효상 의원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창피한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진짜 문제 있어요, 이것!」 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왜 조국은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성찰할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문제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주영 마무리해 주세요.

○강효상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은 좀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주영 강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송옥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화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화성 출신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오늘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민생과 관련된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지닌 책무를 다하고 정치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일본 땅의 약 45%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예, 들었습니다.

○송옥주 의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산 최상품 복숭아를 60%나 싸게 내놔도 사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아무래도 방사능 관련 안전 때문이겠지요.

○송옥주 의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배출된 세슘 137의 양은 히로시마 원폭 때보다 168배나 많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인근 어린이들이 갑상선암에 걸릴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67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수치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그것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옥주 의원 그런데 아베 정권은 방사능이 검출되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먹이겠다고 합니다. 또 선수촌은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삼나무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에게 그런 곳에서 먹고 생활하고 훈련하고 시합을 하라고 합니다. 운동경기는 심리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선수들의 안전 문제, 그에 따른 심리 문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인류에도 중요하지만 방사능 오염 지역에 우리 선수들을 보내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쿄올림픽에 꼭 참가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국민 안전을 기준으로 참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예, 저희 정부는 또 대한체육회와 함께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관련 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송옥주 의원 국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예.

○송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관방장관은 방사능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송옥주 의원 현재도 후쿠시마 원전 1·2·3호기 원자로에 냉각수를 계속 주입하고 있고요, 이 오염된 지하수가 매일 130t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제사회가 투명하게 알아야 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가까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처를 잇따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특별히 이 사항은 국제공조가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제공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양국 정부 간의 일대일 관계에서는 외무성과 우리 외교부 그리고 환경당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IAEA를 통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 양은 1000만t이 넘고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수입량이 130만t이 넘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에 반면 방사능 우려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화력발전사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 한 장이면 수입허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국내 검사체계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큼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일본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에 의하면 0.1μSv라고 신고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 6일 날 평택항에서 실측을 해 봤더니 0.28μSv입니다. 측정 결과 차이도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일본 정부의 방사능 노출 안전 기준인 0.23보다 25%나 초과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석탄재 입고 현장간이측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만큼 향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수입업자가 방사능 측정 결과를 제출하면 그걸 믿고 그냥 받아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다름은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체를 다 조사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시료를 여러 깊이에서 채취해서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이 방사능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임의의 위치에 분포하기 때문에 일회성 간이측정이 아니라 전량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시멘트 원료로 제공이 되고 또 건축재료로 지금 활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 깊이, 이쪽은 깊이 10cm, 이쪽은 50cm 이런 식으로 여러 깊이의 시료를 채취해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보강해 갈 필요는 있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송옥주 의원 국민들이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철저하게 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송옥주 의원 다음은 환경부장관님 나와 주시

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부 관계 법령 등에 석탄재 방사선 측정 방법과 안전관리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촘촘한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또 환경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일단 지난 8월 8일 날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수입 석탄재 안전 관리 강화 계획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송옥주 의원** 예.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때 통관 시 직접조사 강화를 하면서 분기별로 1회 조사하던 것을 전수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에는 통관할 때 방사능 중금속 함량을 전수조사 하는 그런 기준도 또 마련했구요.

아울러 질문하신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 고시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라 해서 거기서 수입 석탄재 방사선 측정 방법이라든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일본산 석탄재 등 이 건축재료가 라돈 아파트와도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랑 국립환경과학원이 입주 전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라돈 농도 시범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최대 533Bq 까지 측정이 됐습니다. 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 대비 5.3배 수준이고요, 평균 농도도 권고 기준의 2배나 되는데 이런 실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장관님, 말씀 좀 주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의원님 제시하신 그 수치는 시범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시범조사 대상은 수도권 일부 단지였고 한 60호 정도에 대한 주택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주택은 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결과치가 지금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는 그런 편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별도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라돈 문제를 관리할 참입니다.

○**송옥주 의원** 전국 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송옥주 의원**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유해한 건축자재가 유통될 수 없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정부에서는 지금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축자재 라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축자재 10종에 대해서 라돈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대개는 유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하로 조사가 됐습니다.

○**송옥주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돈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라돈 아파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라돈 건축물 퇴출을 위한 라돈 3법’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부처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야권과 언론에서 ‘노인 일자리 증가는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질 나쁜 노인 일자리를 양산해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취업자 45만 2000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39만 1000명으로 8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 증감으로 대입을 해 보면요, 특별히 노인 일자리만 늘어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사이에 전체 인구가 33만 5000명이 늘었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 증가분이 55만 6000명입니다. 15세에서 60세까지 나머지 연령층이 22만 명이 감소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취업자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하고 취업자 수 증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취업자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고용률 측면, 연령별 고용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 40대를 제외

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노인 일자리는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서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소득보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일 경험 기회까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노인 복지에 대한 체제가 취약한 것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아까 고령화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비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꼼꼼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면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의 도입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가 작년 11월에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3.2%,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4.3%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작년의 그 시점에서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 7월부터 52시간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300인 이상 기업만 조사를 해 보면 탄력근로제를 23.8%, 선택근로제는 23%까지 도입을 하고 있어서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크게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송옥주 의원**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게 도입 절차상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위법사례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민원 제기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또 이에 대해서 대책은 뭘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노동연구원에 저희가 의뢰,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동근로자대표와 별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그런 사업장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한 43.5% 정도 됐었고요. 또 이 중에서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는 서면합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2주 단위 특별탄력근로제 도입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면 한 22개사 정도 있었습니다. 15.9% 정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송옥주 의원** 또 이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휴식권 보장 등, 건강권 확보 및 임금보전 등 노동자의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지난 금년 2월 달에 경산노위에서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된 노사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합의해서 개편되는 탄력근로제 방안에 따르면 근로일간의 11시간 연속 휴식제 그리고 임금보전 방안을 만들어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정착을 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무까지 노사정 합의에 문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 52시간제 취지와 그리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의원** 이게 실제로 그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지적사항이 많은데요. 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인식과 활용도가 좀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상황이 파악돼 있고 대책이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작년의 경우에는 집행 실적이 51.7%로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지난 8월 말 현재 71.7%로 집행해서 활용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금년 말까지는 전액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정부 지원대책의 활용도도 높이고요 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현장 연착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도 좀 완화를 하고 지원 대상이라든지 기간 또 추가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동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

지,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가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장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의원** 일부 측에서는 우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착 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차질 없이 안착해 갈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부터 299인 기업에 대해서 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대비해서 저희 부에서는 50인에서 299인 기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취약한 기업을 4000개소를 선정해서 일대일로 밀착 지원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 관서에 지방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해서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해법도 제시하고 각종 정부 지원제도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인노무사의 무료상담도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렇지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돌발 상황 시 연장근로가 있다든지 집중근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요구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조속한 탄력근로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과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노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또 가구 간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송옥주 의원** 이게 사실인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노인 일자리라든가 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또 소득 이런 것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역대 정부 또 어느 나라 정부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건 다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됩니다.

최근에 통계청은 2인 가구 이상만 통계를 잡았는데요, 1인 가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2인 가구 이상만 통계를 잡아서 현실을 반영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인 가구도 포함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1인 가구의 소득이 생각보다는 괜찮고, 그래서 가장 소득이 좋은 층과 그렇지 않은 층의 격차가 오히려 더 좁아졌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확산을 위해서 정책기조를 유지할 하되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노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옳은 말씀이시고요, 원래 소득주도성장의 개념 속에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안전망—실업급여를 확충한다든가 기초연금을 올려 드린다거나 기초생활보장의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장애인 지원을 높인다거나 이런 쪽이 소득주도성장의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의료비 경감, 많이들 실감하실 겁니다만 그것을 포함한 생활비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 이것도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많이 그동안에 논란이 됐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수입을 올려 드리는 것 이것도 소득주도성장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는 2.87% 인상으로 지금 잠잠하고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일종의 조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것은 조정되고 있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예를 들면 의료비 경감처럼요—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되 시장에서 수용하기 더 좋게 보완해 가는 작업은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송옥주 의원**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88.4%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농·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는 숙소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농업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79%가 임시주거시설인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에서 살고 있고요, 17.5%는 소방시설이었고요, 30%는 난방시설조차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농업 부문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입니다. 대부분 농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외국인 숙소시설에 대한 개선 여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의 경우에 이게 계절적이나 간헐적으로 인력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숙소에 대한 투자가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숙사 시설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업 부문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공동숙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제 고향이 화성인데 여기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에 대해 생각이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도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와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 사업주들 쪽도 한번 살펴보고 또 지자체 등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옥주 의원** 또 지역별 단위농협 등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내에 있는 빈 농가를 공동시설 활용해서 개보수를 하거나 철거 후에 공동시설 신축 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 등에서 진행 중인 농가 빈집 정비사업과 매칭하는 지원사업도 가능해 보이고요.

장관님께서 관련해서 의견 좀 밝혀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의원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저희도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면서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니까 59.4%입니다. 이게 OECD 36개국 중에 32위로 하위 수준이고 또 십수 년째 6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지도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성활동 참가율 자체가 그냥 여성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선 일차적으로 가장 가깝게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엠커브(M-Curve)가 극복되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요인이지만 그 외에도 현재 고령여성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훨씬, 다른 연령층

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또 현재 출산·양육에 대한 여성의 전담 또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양육은 공동으로 한다는 이런 문화가 확산되지 않아서 남성육아휴직제가 정착되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돌봄역량을 강화해서 돌봄자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돌봄 공동체를 높여서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전담되는 것을 경감시키는 한편 또 우리 사회 전체에 돌봄의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서 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인데 이들의 노동조건이나 또는 급여수준이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유인조건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점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옥주 의원 그런데 제가 여가위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예산 배분이라든지 그런 게 여가위가 약간 힘이 약해서 그런지 잘 못하시잖아요. 여기 총리님도 계시고 여러 관계 장관님과 의원님도 계신데 부탁 말씀 좀 드리세요, 여가부 활동 열심히 하시겠다고.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돌봄노동은 한 번 해 보시면, 최근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알겠지만 하루 이틀만 해도 그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또 잠시도 쉴 수도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돌봄노동이 여성에 전담화되어서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치의 사회적 재평가가 되지 않고 있고 돌봄노동이 사회노동 할 때도 저임금 직종으로 편입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여러 돌봄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출산, 아까 여러 가지 노동조건 개선·노동 탄력근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성이 일하기 쉬운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개선의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감사드립니다.

○송옥주 의원 마지막으로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관련된 질문을 드

릴까 하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학력을 위조하셨더라고요. 단국대 수료가 아닌 제적이고 또 교육학 석박사 학위도 허위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이후에 25년간 총장으로 장기재임을 했고요, 이게 법에 저촉은 되지는 않지만 상식적이지도 않고 총장의 대학 사유화가 되는 그런 우려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비가 전용되는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야당 의원과 내통을 해서 표창장 위조를 기획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혹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와 별도로 교육부 차원의 운영상 비리 등에 대한 검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말씀하셨던 단국대 제적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만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학의 학사, 석박사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는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학력이 허위라고 하면 이러한 허위 학력을 기재해서 총장이나 이사로 승인하는 절차나 과정에 또 이사회 회의 과정에 위법적인 사항은 없었는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요.

저희가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부 차원에서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검토해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노동자의 설움을 외면한 채 민부론을 외칠 때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미세먼지로 인해 숨쉬기 힘든 고통을 겪지만 동시에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

할 뿐 아니라 미래의 행복까지 좌우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청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주영** 송옥주 의원 참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보라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는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신보라 의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그건 우리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해서 감사까지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실상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좌절하고 경악할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5개 공공기관은 감사원이 감사하기 때문에 권익위 조사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권익위원회가 이미 취했던 조치와 똑같은 정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보라 의원** 감사원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본다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매우 문제가 많았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 정부가 주창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위험의 외주화 그 방지는커녕 위험업무에 비전문가가 내리쫓아 지기도 했고 각종 채용특혜 수단으로 악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비정규직이 됐을 때 어땠었던가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누군가가 정규직으로 됐을 겁니다. 보면 10% 이쪽저쪽이 친인척인 것 같다고……

○**신보라 의원** 예, 15% 정도가 친인척 채용으로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 모두가 불법이라고 단정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신보라 의원** 아무튼 이 수단을 악용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꽤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전체, 이 5개 기관을 제외한 그 전체를 조사해서 했던 조치와 유사한 또는 똑같은 그런 것이 필요치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익위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신보라 의원**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국민들께서 분노할 일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물론입니다.

○**신보라 의원** 총리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 뒤로도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이럴 소지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 감사원 조사 결과로도 자체조사 보다는 80명이나 더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던 올해 2월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153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된 기관을 감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더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께서 이 문제가 된 공공기관들은 전체 감사를 하자 이렇게 감사원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요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권익위 등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보라 의원**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지난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였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공분을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조국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까지 더해져서 청년과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고위공직자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 국민들이 저는 이 정부에 분노하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문제의식이 의원님과

다를 리가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앞에 놓여 있는 불공정이 의심되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저는 ‘3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입학·입사·입대, 이 세 가지에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고 믿어 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분야, 물론 입사나 입대는, 특히 입대는 나름대로 공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왔는데 여전히 당사자인 청년들은 불공정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다행히 비수도권 대학 출신들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채용률이 높아졌는데 여성 채용률이 높아진 것을 블라인드 채용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인데요,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 어쨌든 입학 문제의 핵심은 조국 장관이 퇴진하는 것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자 마음입니다.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조치를 요구했는데 서울시가 불복했습니다. 이것은 온당한 반응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서울시의 항변을 제가 제대로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양쪽을 들어 보고……

○**신보라 의원**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저는 서울시가 당장 해고를 해도 모자라고 사죄는 못할망정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신보라 의원** PPT 띄워 보시지요.

없을 무 자 ‘법無부장관’. 지금 조국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는 뜻에서 촛불을 든 청년 학생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저는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 이 뜻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이주영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물병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보틀, 보이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예, 보입니다.

○**신보라 의원** 이 보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보라 의원** PPT를 보시지요.

청년들이 조국 장관 임명으로 ‘대한민국 정의가 죽었다. 그러니 우리라도 정의를 채우자’라고 만든 상품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민심이 모여 조국 퇴진 촛불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이런 청년들의 집단적인 외침,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저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의 비판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제 아이와 나이가 비슷한 청년들이 느꼈을 그런 아픔,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청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 취임하고 맨 먼저 만난 사람들이, 청년들이 특성화고 졸업생, 건설노동자, 코레일 비정규직 이렇게 만났습니다.

○**신보라 의원** 만나신 청년의 대표가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집단적인 청년들의 행동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조국 장관이 2015년 청년들에게 그토록 조언하고 독려했던 것입니다. PT를 보시지요.

2015년 조국은 청년들 아픔에 공감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20대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식인이라던 조국의 심각한 언행불일치, 위선, 자녀들에게 쥐어 준 부당한 특혜, 불공정, 불의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고 촛불을 들고 집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셔야지요.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청년들의 비판,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하겠습니다.

○**신보라 의원** 분명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 이 문제의 근원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서 계시는 조국 장관입니다. 장관이 사퇴하셔야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의 자녀들 스펙 장소는 유독 아버지 직장, 어머니 직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이자 공익인권법센터 참여 교수였

다는 것, 어머니가 동양대 교수였다는 것,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장에서 중요 스펙을 쌓았다는 것. 청년들은 이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한 행위였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의 장을 이 부모들이 망쳐 놓았다고, 어지럽혀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조건 허위건 그냥 이조차 부끄럽다, 퇴진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 자녀들이 부모 백으로 쌓은 스펙,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어머니 정경심 교수 직장입니다.

딸에 이어 아들도 지금 동양대 수료증 위조 논란에 있습니다. 당시 아들이 수료증을 받았다는 프로그램이 ‘풍기문란! 콘서트 인문학’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예, 거기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 PT 보시지요.

이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은 명백히 영주의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들은 서울 한영외고를 다니고 있었지요. 참가 요건 자체가 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참가를 할 수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꼭 그렇게 제한되지 않았고요 넓혀져 있어서 그래서 참석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참석을 했습니다.

○신보라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라서 국비 지원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고등학생·중고등학생들 다 사진이 있고 스태프 사진들도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영주지역 중·고등학생 외에는 참가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동양대 ‘풍기문란! 인문학 콘서트’ 프로그램에 그러면 참여한 게 확실하다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이미 이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 명백히 말씀하십시오. 아까는 참여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보라 의원 아들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직장은 동양대였지요 이 프로그램의 공동 연구자였고 강연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그렇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보라 의원 자꾸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경심 교수, 아내의 직장 동양대 그리고 이 프로그램 공동 연구자이자 강연자 그리고 자녀는 어머니의 직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통상적인 대중……

○신보라 의원 그래서 참석 여부, 수료증 위조 여부는 검찰에서 밝혀겠지만 실제 참여를 했건 하지 않았건 어머니 직장, 어머니와 관련 있는 프로그램에 아들이 참가 대상도, 자격도 안 되는데 버젓이 참여자가 된 것 이것 자체가 명백하고 부당한 특혜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공개강좌입니다. 그게 새로운 특별한 특혜가 아니라 공개강좌에 참석해서 그 수업을 들은 것입니다.

○신보라 의원 공개강좌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였으니까 정보도 알고 참가 기회도 생긴 것입니다. 이 수료증에 대해서도 엄마 찬스뿐만 아니라 허위 경력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리하면 아들의 동양대 수료증은 애초에 엄마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료증이라고 봅니다. 자격 안 되는 아들의 수료증 특혜로 어떤 청년들의 입시 기회가 박탈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고등학생 대상 공개강좌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보라 의원 고등학생 공개강좌라고 했지만 명백히 영주의 농촌지역 학생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신보라 의원 그리고 어머니 직장에서 수료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아무리 봐도 청년들은 부당하게 느끼는 것이지요.

논란이 된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바로 어머니의 직장, 동양대에서 갑자기 급 나와라 뚝딱하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입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기간,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신보라 의원** 딸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 모습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까, 당시에요?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신보라 의원** 왔다갔다했을 것 아닙니까? 자택은 서울에 있었고 한영외고를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아이의 일이나 제 처의 일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정 그런 문제에 세세하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는 바는 아이들 침삭지도 등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 국민들께서 이 답변을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표창장도 위조 없이 받은 게 사실이라는 입장인가요?

○**법무부장관 조국** 저는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인턴을 했고 그 뒤로 표창장을 받아 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 동양대에서, 딸이 엄마 연구실에서 도왔다는 것은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그 상세한 것은 제가 알지도 못합니다.

○**신보라 의원** 지금 답변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법무부장관 조국** 엇갈리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영주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제가 어떻게 그 당시 확인을 했겠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신보라 의원**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6일에 있었고 지금 대정부질문은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가 중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조차 지금 서로 확인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저희 아이도 이미 조사를 받았습시다. 받았고 검찰에서도 압수수색 등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수사와 이후 재판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신보라 의원** 따님은 엄마 연구실에서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검찰에서 어떤 상세한 진술을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검찰에서의 저희 딸 아이 진술 내용을 제가 지금 어떻게 상세히 알겠습니까.

○**신보라 의원** 동양대 표창장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자료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학교육원 프로그램도 아니다 그리고 영어영재교육원 프로그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보라 의원** 아니요, 인사청문회 때 발표를 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인사청문회 시기에 당시에 제가 확인했던 바대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자체가……

○**신보라 의원** 그래서 동양대 교양학부 인문학 프로그램이라고 한 거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세밀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말씀드리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보라 의원** 장관 표현에 따르면 이게 워낙 소규모 프로그램, 그래서 교양학부에서 진행했지만 워낙 소규모여서 실제 아무리 찾아 봐도 제가 이름도, 기록도,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 프로그램에서 총장 표창장이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수사 중이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미 진행 중인데 제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신보라 의원** 저는 부산대 의전원이 입시에 총장·장관급 표창 경력을 요구했던 상황에서 표창장이 가히 창조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아들딸 모두 동양대 상장·수료증·표창장이 입시 스펙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직장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장관은 자녀가 어머니 직장에서 만들어 온 입시 스펙에 대해 한번이라도 부적절할 수 있겠다, 이것 누가 보더라도 부모 입김이 작용했겠다 오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죄송하지만 당시에 아이 교육 문제에 좀 무심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

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최근에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 저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은 이게 부당하게 주어진 특혜라고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직장입니다. 6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는 ‘딸이 공익인권법센터 체험활동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예, 기억합니다.

○**신보라 의원** 그러면 체험활동은 인턴과는 다른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보라 의원** 체험활동과 인턴활동이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그 단어가 영어와 한국어라서 유사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보라 의원** 명백히 인턴을 하면 공익인권법센터에 가서 배우고 익히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체험활동은 잡월드의 직업 체험하는 것과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활동을 했는데 인턴 증명서가 발급됐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부당한 것이지요. 체험이 인턴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그건 제가 그 센터의 증명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는 센터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역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대학원 지원할 때는 고등학교 시절 인턴은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원 리스트를 보면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거짓말 하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글썄, 저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지원을 할 때 고등학교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그런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학 지원할 때는 고교 시절 활동을 제출하고 대학

원 지원할 때는 대학 시절 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통상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신보라 의원** 정리하면 이번에는 아버지 직장 서울대 그리고 참여교수로 있던 직장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아들딸 모두 인턴 증명서가 발급되거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님은 2주간 인턴을 해서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자녀들은 어머니 직장, 아버지 직장에서 주어지거나 만들어진 스펙으로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국민 정서상 이 결과가 정의로운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어떠한 시각이 있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당시 그 시점에서 이런 고등학생 인턴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언론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보라 의원** 고등학생 인턴을 아무나 활동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턴을 찾아서 한 청년들을 우롱하는 발언입니다.

(「신청한 사람한테 해 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 한 백 번 정도 질문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 조국** 그 시기에……

○**신보라 의원** 저는 퇴진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질문하세요,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정책질의도 좀 하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 조국**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의원님.

○**신보라 의원** 말씀 잘 새기지 마시고요, 책임을 지신다면 ‘책임을 지고 뭐뭐 한다’가 중요합니다.

(「청문회 합니까, 청문회?」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십시오. 사퇴만이 답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인 자리에 앉아서 답변 좀 들어 보세요.

매일 빠지니까 그렇지……」 하는 의원 있음)

(「역시 젊으니까 최고 낫다」 하는 의원 있음)

(「공부할 시간을 청문회에 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프긴 아프구나」 하는 의원 있음)

(「시끄러!」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소리야!」 하는 의원 있음)

(「‘시끄러’가 됩니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미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자녀들의 부당한 특혜와 위조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혜를 특혜인 줄 몰랐다면 윤리의 실종이고, 알았으나 무시했다면 위선입니다. 실종된 윤리의 주인공 법무부장관 즉각 사퇴하십시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청문회를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희상 신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용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의원 감기로 인해서 기침이 심해서 걱정입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용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만에 농업국가에서 산업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변혁기를 맞이하여 많은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때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추어 노동구조의 변화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4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웃음소리)

○이용득 의원 지난 50년 동안의 압축 성장은 정부 주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독자적인 산업화 모델이나 기술혁신은 없었고 선진국의 산업발전 형태를 쫓아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은 경제성장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렸고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쭉 제기됐던 문제입니다만 노사구조,

노사제도, 노사문화를 이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용득 의원 그러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 즉 쫓아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선도형 경제, 즉 쫓기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전광석화와 같은 예측 불허의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동구조의 변화 속도를 정부 혼자서는 과거식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느린 속도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처럼 산업현장의 주축인 노사가 정부와 함께해야 합니다. 산업의 변화를 피부로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고, 따라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고 산업현장의 기업인과 노동자이기 때문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15년 전 제가 처음 노사의 동참을 주장했을 때 사용자들도 찬성했습니다. 박수를 많이 받았습시다. 이것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사관계의 완성, 즉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완전히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에 노사관계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노사관계라 하면 전체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총노동 대 총자본의 관계인 중앙노사관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10% 노사관계뿐입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0개국 중 종합순위가 15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4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세부항목인 노동자의 권리와 노사관계의 협력 분야에서는 각각 108위와 12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즉 노사관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일상에서 느끼는 것처럼 노사관계가 비타협적이고 신뢰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또 노동자 사이에서도 많은 격차가 있다는 점, 그런 것 등등이 우리가 세계경제포럼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용득 의원 조직 일뿐만 아니라 노사가 하는 일도 사업장 내의 분배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또 그것을 둘러싸고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득 의원 동시에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득 의원 그런데 적정선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누구 편을 들게 되고 그래서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급변하는 국제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당사자가 적정선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10% 노사관계 시스템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10% 노사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로 사업장 내 분배에만 한정되어 있는 노사관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관계 시스템을 보완하고 바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노동 대 총자본의 중앙노사관계를 완성시켜서 노사와 정부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10%가 아닌 90%를 포괄하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만들어 보완시켜야 됩니다.

둘째, 하는 일을 바꿔야 합니다. 사업장 분배 문제만 다루고 있는 현재의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을 벗어나서 사회경제적 의제 전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셋째, 그러려면 전문가 중심의 노사관계가 보완돼야 합니다. 현재의 10% 노사관계 시스템에서는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자기 조합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장 출신의 활동가들만의 영역입니다. 자기 사업장 조합원들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총노동 대 총자본이 사회적 대화로 노사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사회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기업별 노조라는 그 한

계 때문에 서로 간에 좋은 방향의 경쟁이 아니라 부담이 더 커지는 방향의 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강경한 쪽으로 더 치닫는 경향도 있고 설령 그 합의가 된다 한들 전체 노사관계를 규율하지도 못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출발로서 경사노위가 출발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매우 멀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주신 이런 제안들…… 의원님께서 기왕에 노사관계에 생애를 다 바쳐서 고심해 오셨으니까 일생 작업으로 한번 이것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차라리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용득 의원 제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새롭게 90%의 노사관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경사노위는 10% 노사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조직 취약계층 90%를 포괄하는 노사관계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또 누가 만들지, 전문가의 규모는 얼마나 돼야 하는지, 기업 쪽 파트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그리고 독일의 2개 자치주, 북이탈리아에서 100여 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노동회의소 모델을 주목해 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례를 보면 조직률 27%의 노동조합과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회의소라고 하는 노동자 권익 대변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우리처럼 노동현장 출신의 활동가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노동회의소는 각 분야의 전문가 2000여 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회의소라는 두 축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완벽한 대표성을 실현한 것입니다.

또한 기업인들은 경제회의소에, 농업인들은 농업회의소에 모두 가입하여 노총과 3개 회의소가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노동정책은 물론이고 산업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 등 국가 사회의 전반적인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모델을 알

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알핏 들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카운터파트(counterpart)로서 이쪽이 사용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라면 이쪽은 노동자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노조 가입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거기 가입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활동가 중심이 아니라 업종별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상공회의소와 생산적 대화를 하는 그런 모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득 의원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경제회의소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노동회의소의 파트너는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회적 대화 모델을 도입해서 현재 노경총 중심의 10% 노사관계와 상호 보완적인 90%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10플러스 90% 체제의 완성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공약으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11월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는 대선공약은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로서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한국형 노동회의소가 국정과제에는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체계 구축 방안’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구체적인 진척이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경사노위에 다종다양의 계층을 더 많이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처럼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중간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바로 그런 한국형 노동회의소 체제로 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이지는 못합니다만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득 의원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너무 늦었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득 의원 총리 들어가기 전에 다른 질문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임청각은 보물 182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방문하셨지요.

일제에 의해 훼손된 임청각 복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인 석주 이상룡 기념관 건립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약 7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보훈처나 문화재청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 약 50억 원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고작 수십억 원 때문에 좌초되지 않도록 특별교부금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보훈처, 문화재청, 경북도, 안동시 협의를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면 기꺼이 해서 빨리 합의에 이르고 사업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득 의원 총리 들어가시고 고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국가로서 뒤늦게 김대중 정부 시절 최초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10% 노사관계의 한계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 주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유일한 법적·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경사노위의 참여자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자기 사업장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고 대변해야 하는 10% 조직 내의 활동가들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관, 10% 노사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이 대선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까 총리님께서도 답변드리신 것처럼 저희가 국정과제로 돼 있는 미조직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노동회의소 설립과 관련해 의원님께서 노동회의소 설립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노사와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득 의원 저는 40년 동안 노동계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15년 전부터는 중앙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했는데 왜 안 되었을까요?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는 문제로 정부가 반대한 것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도 더 큰 국가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청사진을 만들어 갑시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 고용보험기금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저희 고충을 아 마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용보험기금의 경우에는 저희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노사와 국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한 번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득 의원** 노사의 박수를 많이 받았다고 아 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는 잠시 미루고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명 이후에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나라가 참 시끄러웠지요?

정치권이, 언론이 그리고 이제는 국민까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다 나서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난 4일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조국 장관님과 관련해서 너무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정사의 소소한 것까지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시간 구매 받을 필요 없이 미처 말씀하지 못한 게 있다면 다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조국**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미확인 의혹 보도의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마냥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 가족들은 검찰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순히 응할 것이고 저는 일체의 개입이나 지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가족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서는 향후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저 역시 법적인 얘기를 떠나서, 법적인 의미를 떠나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혹이나 심증이 바로 사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혹이 나오면 그게 바로 유죄로 되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의 일로 많은 국민들이 저에게 또 제 가족에게 많은 실망을 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저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광장에 나오셔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저 개인을 위해서 또는 제 가족을 위해서 그러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흔들릴까 봐, 무산될까 봐 걱정되셔서 전국에서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불쏘시개 정도 역할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득 의원**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고,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임명될 때 제가 부여받았던 과제 그것을 다 하는 것으로 저의 책임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득 의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저는 조 장관님이 대통령에 나오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모든 가정의 소소한 가정사까지도 다 들춰 내서 장관을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장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감사합니다.

○**이용득 의원** 40년 노동운동에 몸담았던 저는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는 올바른 노사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총노동과 총자본 관계의 완성, 노사의 산업 발전과 사회

발전의 동참, 갈등과 반목에서 대화와 협력으로의 사회문화 변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위해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10 플러스 90%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이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출석 의원(285인)

장길부	장병원	장석진	장창일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장효상	장훈식	경대수	고용진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김경진	김경협	김광립	김광수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김규환	김기선	김동철	김두관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김성수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金成泰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여영국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김정호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김종석	김종희	김종훈	김중로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김해영	김현권	나경원	남인순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이상민	이상현	이석현	이수혁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이양수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완주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혜훈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점식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재성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흥
황 희

○개회 시 재석 의원(82인)

강 훈 식 권 미 혁 김 규 환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성 원 김 성 태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정 우 김 종 석 김 한 표
나 경 원 맹 성 규 문 희 상 박 경 미
박 덕 흙 박 선 숙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현 박 지 원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삼 석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언 석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안 상 수
엄 용 수 원 혜 영 유 동 수 유 은 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준 호 윤 호 중 이 개 호 이 규 희
이 만 희 이 수 혁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재 정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혜 훈 이 후 삼 인 재 근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해 철 전 혜 숙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용 기 정 인 화
정 춘 숙 조 원 진 조 훈 현 주 호 영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교 일 최 운 열 표 창 원 함 진 규
홍 철 호 황 주 흥

○산회 시 재석 의원(68인)

권 미 혁 김 광 수 김 민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성 원 김 수 민 김 영 진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종 회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남 인 순 문 희 상
민 홍 철 박 병 석 박 성 중 박 정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서 삼 석
서 영 교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언 석 송 옥 주 신 보 라
안 상 수 안 호 영 엄 동 열 위 성 곤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은 혜 윤 영 일
윤 준 호 윤 호 중 이 개 호 이 동 섭
이 상 민 이 용 득 이 원 욱 이 인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학 영 이 현 승
임 이 자 전 혜 숙 정 갑 윤 정 성 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점 식 정 춘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진 선 미 진 영
최 도 자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청가 의원(5인)

김 현 미 김 현 아 박 영 선 이 현 재
최 인 호

○국회 참석자

입 법 차 장 한 공 식
사 무 차 장 김 승 기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이 낙 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 은 혜
법 무 부 장 관 조 국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진 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 양 우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박 능 후
환 경 부 장 관 조 명 래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재 갑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이 정 옥

○출석 정부위원

방 송 통 신 위 원 장 한 상 혁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위 원 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 단체	연월일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김현미	·	더불어 민주당	2019. 10. 1.
보건 복지	·	김현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	손혜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보건 복지	손혜원	·		

○의안 제출

웰다잉 기본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원혜영·강창일·이원욱·신창현·
정갑윤·인재근·서형수·장정숙·김정우·
조응천·이주영·김세연·김상희·맹성규·
김영춘·송영길·김경진·김병욱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김경진·장정숙·이종걸·어기구·
최경환·천정배·윤소하·장병완·김종훈·
정인화·정운천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윤일규·서영교·김병기·김철민·
안호영·기동민·표창원·김병관·정춘숙·
송기현·안민석 의원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박선숙·인재근·김관영·정동영·
김삼화·김성수·이용호·박지원·이재정·

권미혁 의원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9. 9. 30. 정부 제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엄용수 · 이학재 · 추경호 · 박덕흠 · 원유철 · 강길부 · 김광림 · 권성동 · 최교일 · 송석준 · 성일종 의원 발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김정재 · 송언석 · 김성찬 · 박명재 · 추경호 · 곽대훈 · 윤재옥 · 엄용수 · 정종섭 · 김승희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홍철호 · 김재경 · 정갑윤 · 송언석 · 정태옥 · 김선동 · 김석기 · 성일종 · 권성동 · 정종섭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김정우 · 이석현 · 김영진 · 김경협 · 이개호 · 강병원 · 김두관 · 정성호 · 박정 · 김정호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유동수 · 김경협 · 이동섭 · 고용진 · 박정 · 신창현 · 이춘석 · 박선숙 · 전해철 · 이찬열 · 홍의락 · 이규희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조웅천 · 신창현 · 기동민 · 김병관 · 맹성규 · 송기현 · 안호영 · 김해영 · 윤후덕 · 박재호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조웅천 · 신창현 · 기동민 · 김병관 · 맹성규 · 송기현 · 안호영 · 김해영 · 윤후덕 · 박재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이언주 · 원유철 · 황주홍 · 김영우 · 박덕흠 · 권성동 · 정유섭 · 정태옥 · 정병국 · 이현재 의원 발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이인영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이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현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웅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이인영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현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웅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이인영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대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화 · 김정우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현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웅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백혜련 · 김현권 · 박홍근 · 장정숙 · 신창현 · 오제세 · 김민기 · 기동민 · 오영훈 · 강훈식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이원욱 · 송옥주 · 김영주 · 이후삼 · 김태년 · 김두관 · 박재호 · 김영진 · 김병관 · 추미애 · 송갑석 · 임종성 의원 발의)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홍일표 · 정진석 · 여상규 · 김세연 · 이주영 · 하태경 · 윤한홍 · 정우택 · 김영우 · 이진복 · 이종배 · 김종석 · 정갑윤 · 황영철 · 권성동 · 박명재 · 박성중 · 김용태 · 주호영 · 안상수 · 김상훈 · 김승희 · 김기선 · 김성찬 · 김무성 · 김재경 · 최운열 · 이종구 · 정유섭 · 강효상 · 신보라 · 김태흠 · 박인숙 · 윤재옥 · 윤영석 · 장석춘 · 이명수 · 김규환 · 염동열 · 김학용 · 곽대훈 · 정양석 · 지상욱 · 민홍철 · 오제세 · 김정재 · 함진규 · 장제원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정인화 · 장정숙 · 윤소하 · 유성엽 · 김광수 · 정운천 · 김관영 · 조배숙 · 윤영일 · 김종희 · 송언석 · 박지원 · 황영철 · 장석춘 · 이동섭 · 송기현 · 이용주 · 염동열 · 오영훈 · 위성곤 · 안호영 · 박명재 · 강석호 · 정동영 · 김정재 · 최교일 · 김석기 · 김광림 · 서삼석 · 주승용 · 황주홍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정인화 · 장정숙 · 윤소하 · 유성엽 · 김광수 · 정운천 · 김관영 · 조배숙 · 윤영일 · 김종희 · 안호영 · 박명재 · 강석호 · 정동영 · 김정재 · 최교일 · 김석기 · 김광림 · 서삼석 · 송언석 · 박지원 · 황영철 · 장석춘 · 이동섭 · 송기현 · 이용주 · 염동열 · 오영훈 · 위성곤 · 주승용 · 황주홍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홍일표 · 정진석 · 여상규 · 김세연 · 이주영 · 하태경 · 윤한홍 · 정우택 · 김영우 · 이진복 · 이종배 · 김종석 · 정갑윤 · 황영철 · 권성동 · 박명재 · 박성중 · 김용태 · 주호영 · 안상수 · 김상훈 · 김승희 · 김기선 · 김성찬 · 김무성 · 김재경 · 최운열 · 이종구 · 정유섭 · 강효상 · 신보라 · 김태흠 · 박인숙 · 윤재옥 · 윤영석 · 장석춘 · 이명수 · 김규환 · 염동열 · 김학용 · 곽대훈 · 정양석 · 지상욱 · 민홍철 · 오제세 · 김정재 · 함진규 · 장제원 의원 발의)

이상 2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9. 10. 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북한거주 대통령 친인척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9. 9. 30. 국가정보원장 제출)(비공개)

**북한거주 대통령 친인척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9. 9. 30.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